

통일은 대박이다

들어가며 ..... 4

<<통일에는 오직 통일대박의 길 뿐>>

I. A. 많은 젊은이들의 의문 .....  
B. 《통일은 대박이다》 책 2012년 출간 .....  
C.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가? .....  
D. 통일대박의 구도를 아무나 손쉽게 표절할 수 있는가? .....

II. 왜 통일대박을 통한 통일인가? ..... 12  
A. 이제까지의 모든 통일방안 검토 ..... 12  
B. 실사구시적 통일대박 통일방안 ..... 19  
C. 통일대박론 이제까지 기여도 ..... 21

제 1편 통일대박

01 통일자금 내지 통일비용 ..... 26  
02 통일 이득(구체적으로) ..... 28  
03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G7 가운데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 ..... 39  
04 통일대박 성취 후 통일한국 ..... 42  
05 우리 겨레 새 역사 시작 ..... 44  
06 우리들 현재의 관심사 두 가지 ..... 46  
07 통일대박을 위한 네 가지 필수 요건 ..... 48

|    |                       |    |
|----|-----------------------|----|
| 08 | 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인가? ..... |    |
| 08 | 남남 갈등 해소의 길 .....     | 59 |
| 09 |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     | 62 |

## 제 2편 통일을 만들어 가는 길

|                                 |     |
|---------------------------------|-----|
| 00 통일대박을 통한 통일방안 .....          |     |
| 01 R이론 .....                    | 72  |
| 02 왜 민심인가? .....                | 74  |
| 03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  | 76  |
| 04 북한지역 개발 마스터 플랜 .....         |     |
| 04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         | 81  |
| 05 정경분리정책 필수 불가결 .....          | 87  |
| 06 북 주민에 전과 투입 등 외부정보 유입 .....  | 89  |
| 07 과학기술 교류협력 .....              | 93  |
| 08 통일을 향한 3각 구도 .....           | 98  |
| 09 아쉽게 끝난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드라이브 ..... | 100 |
| 10 통일 후 북 주민들 .....             | 104 |

## 부록

|                                       |     |
|---------------------------------------|-----|
| 01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       | 112 |
| 02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 115 |
| 03 통일 시기, 빠를수록 유리 .....               | 118 |
| 04 남한 북한의 토지개혁 내용 .....               |     |
| 04 토지 특수성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          | 119 |
| 05 통일한국의 토지 국유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비교 ..... | 123 |
| 06 북한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            | 126 |

08 북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허와 실 .....

**07** 우리도 어려운데, GDP 1% 정도를 빼낼 수 있겠는가? · 130

맺는말

## 들어가며

<<오직 통일대박의 길 뿐>>

통일대박의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통일대박의 길만이 우리 겨레 모두가 잘 되는 길이다.

통일 후에도 통일대박의 길이요,

통일 전에도 통일대박의 구도가 답이다.

통일은 여기서 이 통일대박 흐름을 따라서만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통일 문제는 간단하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통일 없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자칫 민족의 멸망만 남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평화 속에서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에서 당당한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더라도 통일을 만들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 길은 통일대박으로 가는 여기서 이 **보물지도**에 나타나 있다.

## A. 많은 젊은이들의 의문

젊은이들 가운데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그들에게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핀잔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조목조목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생각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 없이도 부모님들 덕분에 그런대로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북은 북대로 따로 살라고 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통일까지 들먹이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

그러나 그런 근시안의 틀을 벗어나 눈을 크게 뜨고 전체를 드러다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통일이 되는 시점까지 모든 분단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분단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분단비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래에서 지루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일일이 나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귀찮다고 통일 같은 것 신경 안 쓰고 살면 그 뿐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고 큰 대가를 끝도 없이 지불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비록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분단비용이

금전적으로 환산된 액수만 눈앞에 보여 주어도 눈이 휘둥그레 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대부분 남북분단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예로 북한 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권법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통일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

혹은,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풀어 갈 길은 단기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통일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대박의 길보다 더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예를 들자면, 미국 젊은이들은 군 입대 안하고도 각자 자기 갈 길 잘 찾아 가면서 잘만 사는데 우리는?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분단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

셋째 좌우 혼란은 어떠한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얻는가? 이념이 어떻게 사상이 어떻게 ...

통일이 되어 보다 많은 동포들이 보다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실사구시적으로 최선인 것이다. 무슨 갑론을박이 더 필요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워야 하나?

넷째 통일 없이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언제 급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써 외면하며 지내고 있을 뿐이다.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다섯째,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갈 때 세계 최첨단국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겨레가 당당하게 우뚝 서는 길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은 통일 이후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슴 벅찬 경천동지할 일을 외면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좋은가?

여섯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통일 없이 어영부영 지내다가 우리 겨레가 말 그대로 그냥 자칫 완전히 쫓딱 멸망해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약육강식이 그대로 판치는 정글 같은 세계구도 속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로부터 어떻게 얻어터지면서 재가불능 상태로 완전 밀려 날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상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일본의 노예로 살았다. 벌써 잊었는가? 이런 것이 현실 세계다. 세끼 밥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방심하다가 무슨 변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

는 일이다.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여! 이래도 통일을 외면할 생각인가?

이렇게 단지 몇 가지만 우선 들추어 본다 하여도 우리가 왜 통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싱겁고 뻔하게 들리는 이런 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통일대박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 B. 《통일은 대박이다》 책 2012년 출간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비용 때문에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겨레에게 절실한 통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통일은 부담만이 아니고 동시에 아주 큰 이득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고 작정하였다. 그 후 1년 반이 지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로써 국민정서가 급격하게 대반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꿈적도 않던 국민들의 생각에 실제로 가히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일대박 내용의 흐름을 타고 일련의 바람직한 진전 상황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손을 따라 온다는 큰 구도를 바탕으로,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이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막 시작되던 일들이 세월호의 풍랑

을 만나면서 가라앉기 시작 했다. 이제는 통일대박의 동력이 거의 모두 소진되어 버린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대세의 흐름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넘겨 버린다면 큰일이다. 통일대박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구호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최순실씨 작품으로 박대통령이 그냥 가볍게 써본 말처럼 여기는 오보가 나와서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해명을 하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러나 통일대박이란 그렇게 가볍게 스치고 지나가도 좋은 정도의 말이 아니다. 첫째,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어 내는 구체적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일 수도 없다. 여기에는 R이론과 거시경제학적 구도가 근거에 깔려 있다. 둘째, 우리가 통일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실제로 통일을 만들어 내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래 여러 가지 통일대박론이 여기저기 난무하지만 실제로 유효한 통일대박론은 《통일은 대박이다》 책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통일대박 구도를 그대로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 갈 차기 대통령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두 함께 실제로 통일을 앞당겨 만들어 내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C.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또한 통일되면 누가 잘 되는 줄 모르나 하면서 자

연히 대박으로 가는 줄 아는 것도 옳지 않다. 통일 후에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 길을 이 책에서 명쾌하고도 자세하게 알아보자.

북은 북대로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체제를 부들켜 안고 있는 상태에서 김씨 일가의 대를 이은 독재권력 유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측 주민들은 상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긴장 속에서, 기본적인 식생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겹게 살고 있다.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들릴 뿐이다.

남은 남대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구조를 선택해 놓은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매사에 남북분단 상태에 발목이 잡히면서 활력 넘치는 발전을 성큼성큼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근근이 살아 가고 있다. 근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가 문제라고 한다. 사실상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실제로 결국 통일이 답이라는 데서 정답을 찾게 된다. 이 책을 끝까지 독파하면 전반적인 그림이 명확해 질 줄 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통일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일이 없다. 경제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반 사회문제도 그렇다. 우리 민족 모두가 풍요로운 가운데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격조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통일 없이는 안 된다. 왜 지금과 같은 긴장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야 하나? 현재의 이런 상태로 천만년 그대로 갈 수 없는 노릇이

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어렵더라도 대가를 치르며 통일을 이룩해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답을 간추려 말하자면, 모두 “통일대박”의 길을 충실히 따라 가는 가운데 북측의 민심을 이끌어 오면서 우선 통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통일 후에 또한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올바른 답이다.

남과 북에서 모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왔다. 그런데 이제는 실감이 나지도 않는 공허한 노래로 들리기 까지 한다. 그렇다면 광복, 분단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말로만 통일일 뿐, 남이나 북이나 실제로 통일로 가는 길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뒤돌아보면, 북에서는 고려연방제 통일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거꾸로 너무 뚜렷해지면서 1991년에 이르러는, 김일성 신년사를 뒤집어 볼 때, 그는 이미 통일을 포기했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먹는 통일”은 싫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오면서 왜 계속 통일! 통일을 입에 올렸는가? 그 이유는 북측 주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견 희망을 주면서 민심을 결집시켜야 되겠는데, 무슨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희망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이라도 들먹일 수밖에 없게 되어있었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한 마디로 내부 결속용 구호에 불과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모두 몰락해 버린 지난 세기의 세계사 속에서, 그리고 남북 소득격차가 말도 못하게 크게 벌어진 이제 와서 고려연방제로의 통일이란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그 김씨 일가가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한편 남에서는 북을 거추장스럽게만 여길 뿐, 내면적으로는 통일로부터 거리를 두는 국민정서가 팽배해 있었다. 남한 국민들은 방대한 통일 비용에 놀려 통일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북이 크게 말썽만 부리지 않도록 보험 드는 차원에서 적당히 조금씩 도와 주며 편하게 지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 근시안적 정서를 타개하기 위하여 통일에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또한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 필요 했다. 그리하여 필자는 통일로부터 얻는 방대한 이득을 찾아내었다. 그에 이르는 길을 2007년 8월 국회 예결위에 보고서로 제출하였다.<sup>1)</sup> 그리고 2012년에는 “통일은 대박이다”<sup>2)</sup>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지금 이 새판 책 역시 그 흐름에 따라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

1) 신창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발간번호 116, 2007. 8.31.

2)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초판 1쇄, ㈜매경출판, 2012.7.16.

록 다시 간편하게 다시 정리한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처절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자. 경제가 어려운가? 일자리가 어려운가? 바로 여기에는 통일에 근본적인 답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재삼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다.

즉 경제와 일자리를 놓고 볼 때, 통일이 되기 전에도 통일이 답이고,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이 답이다. 왜 그러한가?

우선 통일 후 통일을 마무리 짓는 안정화 단계부터 알아보자.

통일 후의 상황을 보려면 통일비용 내지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과 통일이익의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 하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통일대박”의 구도를 따라 갈 때,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남북 전 지역 1인당 평균 GDP는 아래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로 올라선다.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 나타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별천지에 이른다. 이 진실한 내용에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귀를 의심하게 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국내외에서 모두 마찬가지다.

D. 통일대박의 구도를 아무나 손쉽게 표절할 수 있는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이 출간 되면서 주위에서 머지않아 숫자만 살짝 바꾸어 자신의 작품이라고 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재미 동포는 통일대박은 자기가 먼저 발표했다고 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동의 와중에서 SBS에서는 차순실씨의 작품이라는 오보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일대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들은 전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이 통일대박의 구도는 1992년 필자가 처음 발표한 통일비용 추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 그리고 통일과 함께 올 이득이 함께 어우러져야 통일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 이득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하여도 어떠한 경제성장 모형을 토대로 하며 어떠한 조건들이 요구되고 어떠한 가정조건을 추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다른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하여도 어찌 기본 모형과 가정 조건 추정치들이 정확하게 필자의 것과 일치하고 계산방법도 정확하게 똑 같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일치할 확률은 단순히 0.0(零)이다.

그래서 필자는 통일대박의 내용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통일대박의 실체를 전해 주어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해 오고 있었다.

## II. 왜 통일대박을 통한 통일인가?

통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통일을 엄청나게 큰 이득으로 결말짓는데 있어서도 오직 통일대박 구도뿐이다. 왜 그러한가?

세월이 하 수상하니 갑자기 통일이 곧 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가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A. 이제까지의 모든 통일방안 검토

우선 이제까지 대두 되었던 여러 가지 통일방안들을 각각 아주 간략하게라도 모두 짚어보기로 한다. 어디에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내어 귀결점에 이르도록 한다.

#### 1. 각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노태우 대통령 이래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사한 형태의 3단계 통일방안들이 있었다. 그 방안들의 제2단계에는 항상 “국가연합”이 포함되어 등장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전혀 다른 속성의 두 정권을 외형적으로만 한 데 묶어 놓는다고 언제인가 자연히 통일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한 마디로 탁상공론일 뿐이다.

## 2. 고려연방제

북의 6.25 남침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부르짖은 이후, 남에서는 1980년대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 사이에 북에서는 1960년대부터 고려연방제를 주장하였다. 1970년대 전반부 까지만 하더라도 북측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 생각에 연방제로 남북이 하나의 틀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공산화 통일에 자신 있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1인 독재 하에서 일반 국민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지금의 북한체제로의 통일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일방안이다. 김정일은 남의 국가연합을 빗대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최근 남에서 이것을 통일방안으로 들고 나오는 대권후보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장난일 뿐 연방제의 틀 속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김정일의 머릿속에서는 통일이란 이미 무의미하게 된지 오래고, 오직 핵을 가진 “군사강국”으로서 정권유지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통일대박”을 만들어 내려면 북한식 공산사회주의, 수령제일주의 가지고는 어렵도 없다.

### 3. 무력통일 방법

이제 와서 무력통일 방법으로는 쌍방 희생이 너무 크고 남북이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쪽에서나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 4. 정치협상에 의한 통일

남북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 남에서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북에서는 수령제일주의, 주체사상, 자력갱생, 군사강국을 목표로 한다. 이는 모두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발상으로부터 나온다. 전 국민이 위주가 되는 남한과 1인 집권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북한은 서로 접합점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협상에 의하여 적당히 섞어 어정쩡한 체제를 만들어 놓는다고 자연히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통일로 연결 될 일이 아니다.

### 5. 강대국들에 의한 통일

역사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대부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하여 결정되어 온 것에 주목한다.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스스로 애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참으로 원숙한 듯한 의견으로 들린다. 그런데 “통일대박”의 구도를 착실히 따라 갈 때,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위상은 근래까지 수없이 많은 꺾박을 받던 상태와는 정 반대로, 대륙,

해양 양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힘차게 뺨어 나가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그렇게 나약한 생각에만 머물 수 있겠는가?

## 6. 중립국이 해답이다.

우리는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 강대 세력들에 끼어 곤욕을 치를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로운 중립국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너무 모르는 말이다. 우리가 통일 10년 후 1인당소득이 놀랍게도 세계 제2위로 올라서는 길을 찾아냈다. 그냥 소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만들어 내는 “통일대박”의 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본 다음이라면, 그와 같이 중립국 운운은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다.

## 7. 반공의 길로 통일

반공, 안보는 민주사회를 지키는 나라의 기본 가운데 핵심이다. 그러나 반공, 안보를 아무리 굳건히 한다고 하여 그 자체가 통일로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안보문제 위주로 진행 되어 왔다. 그 틀 속에서 지난 70여 년의 분단 세월을 뒤돌아 볼 때 통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 진 적이 있었는가?

## 8. 평화통일

평화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둔다. 남북이 평화롭게 잘 지내면 언제 인가는 통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평화 자체가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평화공존은 결과적으로 그저 영구분단의 다른 말일 뿐이다.

## 9. 북 정권을 봉쇄, 압박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길.

남 정부에서는 최근에 보는 바와 같이 전 방위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북을 봉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길로 북한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도 버티어 낸 소위 고난의 행군 과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봉쇄 압박만 가지고는 통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 10. 한 천만 명이 굶어 죽는 상태로 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때까지 기다림.

이렇게 안이한 피동적 사고방식을 보면 기가 찬다. 이것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정상인이겠는가? 동쪽으로서 인간의 도리라는 면은 차치하더라도, 통일 후 모든 국민의 체력이 바로 국력인 것도 생각하자.

## 11.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

근래 식자들 간에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봉쇄, 압박을 통하여 레짐 체인지를 유도한다는 말들을 한다. 그리하여 김일성 후손이 아닌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지도 체제로 넘어가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상과정에서 통일의 길로 간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백일몽일 뿐이다.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다. 북의 경우에는 사람만 바뀐다고 하여 그 체제가 쉽게 바뀔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자리를 잡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권력의 맛을 즐기도록 하는 가운데 협상을 해 나간다면 자연히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영구분단일 뿐이다. 우리 겨레의 영구분단은 결국 우리민족 몰락의 길만 자초할 뿐이다.

## 12. 통일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

의미 있는 말이다. 통일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오다가다 우연히 얻게 되는 통일이란 없다. 간절한 기원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통일이 와 줄 때를 기다릴 수는 없다. 지난 70년 동안은 기도가 부족해서 통일이 안 되었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기원과 기도 자체가 통일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못한다. 안보와 평화가 필수지만 안보나 평화가 자연히 통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13. 통일은 문화적 접근으로만 이룰 수 있다.

타당한 논리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이질적인 생활 속에 그 정서와 생활습관마저 서로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 그 흐름이 반전되고, 또 다시 동질화 되는 때가 오고, 또 그 후 통일의 날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없이 아주 장구한 세월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 14. 선진화 되어야 통일

물론 아주 충분한 세월만 주어진다면 의미 있는 구도이다. 그런데 지금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남한이 경제력이 없거나 북한과의 민생 정도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통일이 어려운가? 현실적으로 남의 1인당 소득은 북 대비 무려 22배를 넘기고 있다. 경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에는 이미 거의 모든 면에서 말 뜻 그대로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이 방안도 핵심을 찌르는 현실적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15. 김정은을 참수하면 통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그러나 북의 체제는 해방 이후 부단히 주민들을 세뇌하면서 일정한



틀 속에 가두어 놓은 결과, 현재 상태로는 갑자기 최고 권력자 한 사람만 제거 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남한 쪽으로 무난히 통일되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결국 현재의 구도 안에서 다른 유력자가 김정운의 자리를 대체한 상태로 같은 구도로 이어져 갈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 민심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수령 하나만 대치된다고 별로 달라질 일은 없는 것이다.

## 16. 풍선에 빠라 날려 보내면 통일

북측에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무너진다. 가장 확실한 길은 대북 풍선 날리기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기능은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풍선 날리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통일방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와 같이 이제까지 대두된 모든 통일방안이 전부 하나 같이 통일로 직접 이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과연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요원하다는 말인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

## B. 실사구시적 통일대박 통일방안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통일로 가는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길은 현실적으로 ‘통일대박의 구도’를 따라 가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길이다. 그 길을 착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겨레는 문자 그대로 이 지구상에서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에 똑바로 주목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1인의 권력유지만을 위한 북 정권은 존재 의미나 가치가 없다. 통일의 힘은 북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통일은 결국 북 주민들의 손을 따라 올 때 실효성 있는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이를 3단계로 정리해 보자.

- 1) 남한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통일대박’ 구도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
- 2) 북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 통일대박의 요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을 이루어 나감.
- 3) “통일대박” 구도를 이해하고 숙지한 북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북 정권을 정리한 다음, 남측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부러워하는 마음과 함께, 남측으로 합류 동화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정도이다.

이를 제2편 통일을 만들어 가는 길 첫 머리에서 다시 상세히 기술하기

로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통일대박의 구도에 있어 우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략히 간추려 보면,

첫째, 북한 내부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고, 그 정권과 주민을 2원화하여 분리 대처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대박론의 근저를 관통하는 R이론이다.

그 정권에 대하여 강에는 강, 온에는 온으로 응대한다. 그 주민에게는 북 군사력을 즉시 직접 증강시켜 주는 일이 아닌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들 생활에 실익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북 주민의 민심이 결국 남측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변화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저변에는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 오는 필설로는 가능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통일 이득이 모두 실제로 남북 지역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사실을 북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있는 한 통일은 없다.

둘째, 통일 전에는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중단 없이 지속되는 정경분리의 구도를 반드시 조속히 채택 시행한다. 북을 압박한다는 명분 아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악수를 두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대로 별도의 흐름을 따라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가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주민 간의 정서 소통이 중요하다.

셋째, 통일 후 10년 기간에 걸쳐 북측의 소득이 남측에 근접해 오는 수준으로 급성장 시킨다. 북측 주민을 남측이 일방적으로 이용하는데 그치는 형태가 결코 아니다. 북조선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잘 사는 통일한국의 당당한 국민이 된다는 사실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 전체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제2위가 되는 통일된 국가로 온 국민이 함께 도약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격조 있고 품위 있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남북 주민 모두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 분단 상태 하에서 저지른 북측에서 각자의 잘못된 기록은 하되, 이를 바탕으로 처벌, 처형은 하지 않도록 한다. 통일 시점부터 명실 공히 모두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 모두 앞만 바라보면서 갈등 없이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한다.

## C. 통일대박론 이제까지 기여도

1) 오랜 기간에 걸쳐 통일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부담감 이었다. 또 한 가지는 고질적인 남남 갈등,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에 더하여 주변 4강의 복잡한 속내들이다.

그러던 가운데 2012년 7월 《통일은 대박이다》 책이 출간되고,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있는 다음 1년여 기간을 거치는 동안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 정서는 놀랍게도 완전 변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50 퍼센트 대 초반에 머무르고, 통일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될 것이라고 여기던 국민들이 전체의 2/3에 이르고 있었다. 그런데 통일대박 개념을 발판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80 퍼센트를 훌쩍 넘기는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별로 필요치 않은 일이란 구태여 힘들여 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국민 절대다수가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일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대박론의 출현은 통일을 비용부담감 때문에 어렵게 만들던 국민 정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통일을 가능의 영역으로 돌려놓은 역사적 공헌을 하게 된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2) 통일대박은 이와 같이 그 효능이 남한에서만 검증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겠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통일대박이란 구도가 출현하면서 북 당국이 부지불식간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이 되려면 통일대박 내용과 구도가 남북에서 다 같이 그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단계가 먼저 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현실적 과제이다.

3) 통일대박론의 영문판(The Road to One Korea: Prosperity in Peace)이 2014년4월 미국 Mike Honda의원을 통해서 Obama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수뇌부 인사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그해 9월 “미백악관: 통일대박론·드레스덴구상 지지”라는 속보자막이 TV에 올라오게 되었다. 또한 2015년 미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본격적인 봉쇄 압박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 의미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로 가는 길을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책의 행간을 이해하고 있는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길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국 간의 정서가 같이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흐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에 통일대박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자.

R E U N I F I C A T I O N



제1편

# 통일대박



통일대박은 크게 경제적인 면과 여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경제적인 면에서의 통일대박이란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01 통일자금 내지 통일비용

통일에 필요한 자금 내지 비용을 대별하여 보면,<sup>3)</sup>

-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 비용**
- 정치, 행정, 군사, 교육, 사회, 문화를 비롯한 여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체계제도 단일화 비용**
-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을 말한다. 이는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하고는 후에 국부로 남게 된다.

---

3) 신창민,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2.8. 28, 1-46면.

이 세 가지 크기의 합은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가 대종을 이루며 전반적으로 통일 후 10년간 매년 남측 GDP의 대략 7%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다.**(부록 2,3,4 참조)

이렇게 필요한 7% 크기의 자금은 1)한시적 군비감축으로 2%, 2)국제 금융시장에서 장기저리 차관으로 1%, 3)세대 간 비용분담이라는 차원에서 통일국채로 3%, 그리고 나머지 1%는 세금으로 충당하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통일대박 구도에 따라 완성하여 나간다면 엄청난 통일이득이 따라 온다. 통일 후 10년 동안 남북 지역간의 소득조정기간을 거치는 동안 통일한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된다. G7 진입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득을 통일대박이란 말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 02 통일 이득(구체적으로)

통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소요자금이 지출되면서 통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이득(Gains), 편익(Benefits), 수익>Returns)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모든 이득과 편익, 수익의 총합계를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무엇보다 서로 죽이고 죽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부터 해방된다. 평화가 보장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입장에서는 발전과 번영의 기본 틀을 얻게 된다.

다음에는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통일과 함께 바로 그 시점에서 분단비용 소멸 형태로 나타나는 이득.
- 2)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을 위한 10년 기간 동안 나타나게 되는 남과 북에서의 방대한 경제적 이득.
- 3) 그 다음 통일 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득과 번영.

#### 1) 분단비용 소멸의 이득

남북분단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분단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분단비용이 통일과 동시에 그 원인 자체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분단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만큼의 이득이 있다. 즉, 분단비용이라는 막대한 부(負)의 크기가 소멸되어, 원점이었던 영(零)으로 돌아오게 되는 차이를 의미한다.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모든 기회비용으로서 분단 상태로부터 유발되는 인명 살상, 이산가족 고통을 비롯하여 모든 불편, 불안, 불이익, 손해, 손실, 과도한 국방비, 인력 낭비, 위험 부담 등 일체의 비용 내지 기회비용을 포함한다.

- 이에 따르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살펴보면,
-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체하여 매년 GDP 2%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산재·소비재를 증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승수효과에 따라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 남측 군 인력 감축으로 10년 조정 기간을 통하여 단·장기적으로 대체로 연간 GDP 2.4% 규모를 증산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후에도 그 보다는 적더라도 역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 청년시절 인적자산을 최대한 증진시켜야 함에도, 분단상태에 따르는 군개병제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던 기회를 다시 회복한다. 직업군인은 별도이지만, 군 생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군에 갈 필요가 없다.
- 북측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점차로 확충되면서 그 동안 큰 활용도가 없던 북측지역 지하자원들이 진가를 발휘한다.
-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남측 입장에서는 대륙으로의 육상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비를 포함한 제반 물류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 지역 상공으로 통과하는 항공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연료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심리적 거리감을 떠안아야 된다. 이로 인한 불이익, 낭비가 사라진다.
- 대륙과의 통로가 열리면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하여 저렴한 천연가스 직수입이 가능하여 에너지 조달에 크게 기여한다. 생산단가 저하와 국제경쟁력 제고가 뒤따른다.
- 남북 통합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부터 오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각종 과학기술의 보완적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가운데 북측에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남측 시장성 관련

노하우와 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남측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쌌던 이유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실제 소요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웃돈 역시 분단에 따르는 비용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되는 이득이 생긴다.
- 금강산은 명시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관광이 가능했다. 백두산, 묘향산 등 북측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명승지는 갈 수도 없다. 이러한 관광자원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만족도와 이득은 통일과 함께 다시 찾을 수 있다.
- 분단으로 말미암아 철조망 등으로 일그러졌던 남북한의 금수강산 많은 곳이 모두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이 그만큼 쾌적해지고 훌륭한 관광 자원들이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된다.
- 명산 아름다운 암석에 흉물스럽게 깊이 새겨놓은 전제군주 김씨들의 이름, 정치구호를 제거해 버리며 제 모습을 찾아 환경 훼손을 제거 하며 금수강산의 제 모습을 찾게 된다.
-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우려가 불식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의 고용 창출효과와 GDP 증가를 얻게 된다.
- 분단 상황에 따르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이득을 얻는다.

- 한국에 대한 평가절하(Korea Discount) 현상이 사라진다. 증시도 적절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비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 이산가족들이 겪었던 통한의 아픔을 뒤로 하고, 평화가 정착된 사회에서 새 삶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북 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사라진다. 이에 따른 인명살상의 불행과 손실의 원인이 제거된다.
-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평화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 북측주민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인권이란 단지 사치스런 허상이었던 상태로부터, 자유의 인간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 과거에 국방·안보 문제 때문에 수시로 나타나던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필요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 분단 상태에 따르는 국가 위상의 약세로부터 탈피하여 드디어 강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국민들은 해외에서 당당한 국가의 시민에 합당한 위상을 얻게 된다.

## 2) 통일 직후 10년의 구간 - \*통일대박\*

통일 직후 남북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당시 남측 GDP 대비 약 7%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투입이 매년 북측 지역에 이루어진다. 이로써 북측 생산능력이 실로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이 기간에 북측의 1인당 소득은 남측의 절반까지 따라온다. 이 절반이란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다. 절대 액수로 볼 때 통일 당시의 남한 1인당 GDP 보다 약 1/3 이나 더 높은 소득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실물자본을 남측에서 생산·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남측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경제성장을 얻는다. 통일 후 10년 동안 남측에서는 통일 비용 조달에 따라 형성되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바탕으로, 매년 11%에 이르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만든다. 이것은 실로 대박이다. 통일 10년 후 통일 초기 소득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가 된다.

이에 따르는 이득, 편익, 수익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 북측 생산을 위한 실물자본 형성 과정에서 “마이 코리아” 정책에 따라 10년 동안 매년 남측 GDP의 7%에 육박하는 자본재를 대부분 남측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길로 가자. 이에 따르는 생산효과, 승수효과 그리고 산업연관효과 등은 실로 막대한 과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경제는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성장으로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적 도약 이래 다시 한 번 그를 능가하는 제2의 눈부신 경제 도약을 이루어 낸다.



- 남측

매년 11%의 경제성장 :

- |                        |             |
|------------------------|-------------|
| 1. 바이코리안 정책            | GDP 대비 5.6% |
| 2. 추세성장                | 3%          |
| 3. 병역 의무 해지로 인한 생산성 증가 | 2.4%        |
- \* 기타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대륙으로의 통로, 규모의 경제 등에 부수하는 추가분 존재)

---

|   |     |
|---|-----|
| 계 | 11% |
|---|-----|

- 북측

통일 10년 후, 통일시점 남한의 소득에 기초하여 남한 추세성장률에 따른 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크기로 북 주민 소득 상승.

그 후 남측지역 경제와 하나로 혼합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반 성장의 길로 들어섬.

- 통일이 되어 대륙으로 향하는 철도, 도로, 항만, 항로, 통신 등이 제한 없이 연결되면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의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내어 대륙으로의 직접 진출이 가능하다. 물류비용, 교통비용의 절감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확대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통일한국은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여러 분

야에서 동아시아권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해양과 대륙 사이에 위치한 입지여건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피해가 컸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유리한 강점으로 반전되어 대륙과 해양, 양 방향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전 화위복의 전기를 맞게 된다.

- 마이 코리아 정책에 따르는 자본재 생산을 위한 인력과 제반 제도 단일화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수요로 말미암아, 인력이 모자라는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업은 자취를 감추고 일자리가 넘치는 상태로 가게 된다.
- 분단된 상태에서 북측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는 별 소용가치가 없던 북측의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 러시아로부터 오는 직결 천연가스관 설치를 통하여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한다. 이로써 생산단가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
- 경제규모와 시장 확대 과정에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득을 얻는다.
-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국민이 된 북측 주민들이 전체 국민의 1/3이다. 이들은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단숨에 선진 국가의 당당한 국민이 되는 이득과 위상과 자부심을 얻는다.
- 통일을 계기로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 형태의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을 북측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부동산 투기라는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실패의 한 가지 고질적인

원인을 제거하며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틀을 갖춘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과 함께 합리적이며 공평한 소득분배 틀을 얻게 된다. 이로써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다.

### 3) 통일 10년 이후 지속적 성장

통일이 이룩되어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분단국가로부터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부수하게 되는 유·무형의 많은 이득을 얻는다. 즉, 남북 소득조정 기간에는 물론이거니와 통일 마무리 이후 안정적인 국가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평화 속에서의 행복한 생활, 그리고 통일에 수반하는 이득, 이익, 이윤 생성, 규모의 경제, 인구·국토·지하자원 등 생산요소 증가, 기술발전 등이 따른다. 제반 분야에 있어서 편리함, 편의성, 그리고 국가 전반적 차원에서의 경제성장·발전, 자본 축적, 국력 신장,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 등이 따라 온다. 한 마디로 평화 속의 번영을 맞이한다.

이러한 이득, 편익, 수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소득조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 지역에서는 그동안 자본 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사실상 계속 자본재 수요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남측 경제 활황을 추세에 따라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남북 간 생산자원 보완성을 실현시키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 북측 지역 자본 조성에 따라 북측 생산·소비 수준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통일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제경쟁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 북측 지역에서는 뒤늦게 개발되게 된 상황을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아 거의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격으로 계획적인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연관 가운데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지역에 따라 조화롭고 바람직하며 환경오염 적은 경제벨트와 생활 양태를 형성할 수 있다.
- 농업 분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은 황해도, 평안도 등 북측 지역에서 화학비료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환 유기농법체계를 도입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서 좋다.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 남측 지역의 경제 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측 지역 산출량 증가를 통하여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토와 상당한 규모의 인구 확보로 명실상부한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

-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경제적 분리관리 후 전국적으로 혼합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병행하여 이루어 내게 될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 단일화와 함께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 통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아무도 쉽게 여길 수 없는 강국이 된다. 국제외교적인 차원에서도 당당한 국가의 위상이 된다.
- 통일한국은 이후 대대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훌륭한 위상과 민족자존의 영광을 갖게 된다. 통일은 사실상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독립운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통일 이득·편익들을 추가한다면,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의 전체적 크기는 당연히 그만큼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나타내게 된다.

# 03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G7 가운데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

2015년의 세계 주요국 1인당 GDP와 인구 추산 통계를 참고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 주요국 1인당 GDP <2015>와 인구 규모

| 국가  | 1인당 GDP (단위 : US\$) <2015> | 인구 (단위 : 천명) <2015> |
|-----|----------------------------|---------------------|
| 미국  | \$55,759                   | 321,329             |
| 영국  | 43,734                     | 64,088              |
| 독일  | 41,181                     | 80,854              |
| 프랑스 | 36,170                     | 66,554              |
| 일본  | 32,481                     | 126,920             |
| 중국  | 7,855                      | 1,367,485           |
| 한국  | 27,340                     | 76,177 (남북한 합계)     |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국제통계연 2016.3  
CIA Factbook 2016, 각국 인구통계

통일한국이 통일 후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경제를 10년간 운용하여 나가게 되면,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다. 가령 남한의 1인당 GDP가 3만 2천 달러 정도인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10년간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 끝에 1인당 GDP가 8만 2천 달러에 근접한다. 그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1인당 GDP는 남측 지역 추세성장 수준의 절반을 따라 오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북경제를 완전 혼합시킨다면 통일한국 1인당 평균 GDP는 6만 2천 달러를 넘는다.

〈표2〉 한국통일 10년 후 G7의 1인당 예상 GDP

| 국 가  | 한국통일 10년 후<br>G7 각국 예상 GDP | 한국통일 원년<br>각국 추정 GDP |
|------|----------------------------|----------------------|
| 미 국  | US\$73,139                 | US\$6만               |
| 통일한국 | 62,021                     | 3만2천*                |
| 영 국  | 56,199                     | 4만9천                 |
| 독 일  | 52,452                     | 4만8천                 |
| 프랑스  | 49,955                     | 4만1천                 |
| 일 본  | 47,457                     | 3만8천                 |
| 중 국  | <7,855>                    |                      |

이것을 위의 <표1>에 나타난 주요국 1인당 GDP의 예상되는 변화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위의 <표1>을 토대로 장차 예상되는 한국통일 시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1인당 GDP를 대략 각각 3만 8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상정 하여 보기로 한다. 그로부터 10년간 매년 2.5%의 경제 성장률을 넉넉하게 가상할 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은 대략

5만 내지 5만 6천 달러에 이른다. 한국통일 시 미국의 1인당 GDP를 6만 달러 정도로 가상하고, 매년 2%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본다면, 10년 후에는 7만 3천 달러가 된다. (국가경제는 선진화 되어 갈수록, 일반적으로 그 성장률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1인당 남북 평균 GDP 6만2천 달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 바로 다음 위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G7진입 정도가 문제 아니다.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세계 제2위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소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이 추정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와 같이 되도록 온 겨레가 단합하여 총력을 기울이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해 낼 수 있다.

이것이 왜 허황된 소리가 아니냐 하면,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확실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래 통일대박이란 말이 회자되니까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통일대박을 얻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 통일준비위원회, 금융위원회, 짐 로저스 등에서 나오는 구도 정도로는 대박을 얻을 수 없고, 그저 공허한 말들일 뿐이다. 구체적 설명은 별도로 한다.



## 04 통일대박 성취 후 통일한국

통일 이득에 관한 말을 하면서 무미건조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양념으로 섞는 말을 하나 끼워볼까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래 세계각처에서 예언자들이 통일 한국의 영적, 경제적 위상을 앞 다투어 예언하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필자가 그동안 통일 후 수년이 경과하면서 통일한국의 위상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지내왔던 데는 조심스런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자칫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된다는 통일대박 구도의 진행상황 자체를 의심하는 일이 벌어질까 보아서다.

지금 분단된 나라에서 지지부진한 전반적 난국 가운데 세계 제2위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꺼번에 그 이상까지

언급하는 것은 자칫 전체적인 불신의 부작용까지 불러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예측이란 아주 장기적이 되면 그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다. 장기로 가면서는 수많은 변수들의 수많은 변화를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영적인 면에서도 통일한국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공산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공산주의에는 본래 영적인 면이 부정되고 물질세계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영적인 세계는 그곳에 들어 설 자리가 없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공산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 위주의 통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산사회주의나, 주체사상, 자력갱생, 군사강국의 목표를 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산사회주의는 그 초기에는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시일이 경과하면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는 그 체제 자체의 경직성에 부딪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 05 우리 겨레 새 역사 시작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와 같이 1인당 소득이,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로 입지를 굳히면,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역사의 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까지 반만년 동안 우리 겨레는 대륙과 해양의 양대 세력 사이에 끼어 무수한 환란을 겪어 왔다. 대륙에서 힘이 생기면 우리 민족 이십여 만의 여성들이 끌려가는 말도 못할 끔찍한 수난을 당했다. 해양에서 세력이 생기면 우리 땅은 초토화되기도 하였고, 종당에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륙의 힘에 밀리고 해양의 힘에 얻어터지면서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대박론에 제시된 구도를 충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형세는 통쾌하게도 완전 역전이다. 핍박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겨레가 힘차게 우뚝 설 차례다. 이제는 대륙과 해양 양방향으로부터 얻어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륙 해양 양방향으로 동시에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구도에 서게 된다. 이 아니 통쾌하고, 말 할 수 없이 훌륭하지 아니한가?  
가슴 벅찬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겨레의 미래상이다.

실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다. 세계사는 최강국이 중동 지방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이동하여 왔다. 현재는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에 까지 와 있다. 다음은 어디이겠는가? 일본, 한국, 중국 가운데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가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 통일을 만들어 내고,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그 저력 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가슴 벅찬 미래를 가지고 있다. 들뜨지 말고 한걸음 또 한걸음 착실한 행보를 이어 나갈 줄 알아야겠다.

## 06 우리들 현재의 관심사 두 가지

우리는 근래 현실적으로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 1) 통일세

우선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통일비용에 따르는 통일세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형태의 통일세는 통일 전에는 북측의 민심을 가져오면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동시에, 통일 후의 일을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것으로서, 우리 총소득의 1%, 그 가운데 세금으로는 0.25%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에는 10년 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총소득의 1% 세금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 그 밖의 통일 관련으로 납부할 직접세금은 없다. 그 기간에 1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2) 일자리

지금 남한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나 탄식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완전히 빗나간 기우에 불과하다.

우선 통일 후 10년 동안은 남북 지역을 경제 분야에 한하여 분리 경영 관리 하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나게 된다.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북측 소모 자본재 생산 때문에 남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또 제반 체제 단일화 과정에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실업은 자취를 감추고 완전고용 상태보다 오히려 그 이상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다.

또한 통일 전에 있어서도 상황을 보아가며 북측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서서히 착수하기로 한다면, 북의 민심으로 다가가면서, 북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데 따라 남한 국내 경기가 활성화 길로 접어든다. 이는 통일 후는 물론, 통일 전에도 실업문제 해결에 통일대박 구도를 따라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07 통일대박을 위한 네 가지 필수 요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일이득은 그냥 통일만 된다고 자연히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 네 가지는 우선 확실하게 대비하고 확보할 때 얻을 수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높이는 데 근간 핵심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통일 후 10년 동안 ① 남북을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분리경영관리, ② 바이 코리아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③ 한시적인 군비 감축, ④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및 북측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순조롭게 실현시키려면 사전적으로 국민들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그 대책에 관한 공감대형성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알맞은 시기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비와 준비 없이 갑작스런 통일을 맞게 되면, 모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가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 1)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을 경제면에서는 분리경영 관리

남북소득을 조정하는 10년의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가져다 바치는 방식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여기에 통일대박의 기운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독일에서처럼 통일 후 즉시 혼합시킨 다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사회보장방식을 위주로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단순히 우리 경제적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통일비용이 거의 2배나 되고, 세금 부담만 따로 본다면 무려 7배 정도로 꺾충 뛰어버린다. 세금이 단순히 2배가 아니다.

이와 같이 10년 동안 경제 부분에서만은 분리 관리하는 이유는 통일 시점에서 북녘 주민들을 차별대우하려거나 통제지배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측 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모든 북녘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다.



분리관리가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의 발전단계 초기에는 자유시장경제 보다 계획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현격하게 낙후된 북측 경제를 일정 정도까지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계획경제가 제격이다.

둘째, 북녘 주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각각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은, 필요 이상의 힘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의 완전 적응이란 분단 되어 있던 기간만큼 다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우선은 지역별로 한 곳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적응·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속성상 그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이들에게 생산 활동 재훈련 과정에서 개개인을 위하여 일일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엄청난 낭비다.

셋째, 통일 후 지역 구분이 없이 혼합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종류의 일에는 동일한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 차이가 문제가 된다. 또 그 위에 실제로 임금, 봉급 지급 총액이 실로 과다하게 되는 것도 통일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도 이상의 임금,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독일에서처럼 오히려 북측 근로자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즉 그들이 생산한 것은 품질에 비하여 단가가 높아짐으로 잘 팔리지도 않는다. 결국 공장이 문 닫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

도록 만들게 된다. 소득조정 기간에는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봉급을 지급 받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으로 보나 본인들의 결과적인 실속을 위해서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넷째, 남측 사람들과 구분 없이 바로 섞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격차가 바로 노출 된다. 현격한 소득 격차가 따른다. 자연적으로 1등 국민 그룹과 3등 국민 그룹이라는 차별화가 확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차별 의식과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

다섯째, 분리관리 10년 기간 동안에는 북측 지역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 차이도 큰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에 익숙하지도 못하면서 자칫 과도한 요구에만 맛을 들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분리관리가 이루어질 때라야 마찰이 적을 것이다.

요컨대 분리관리는 비효율성을 피해가면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무리수의 발생 소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통일 후 10년 동안은 분리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성공적 통일이란 단순히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런데 남북 분리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분리경영관리는 다음과 같은 틀을 바탕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무슨 일이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

하면 되는 일이 없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첫째, 유인효과(Pull Effect)가 있다. 각자의 본래 거주 지역에서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기 본래 거주지역 인근에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인데, 불확실성 속에 묻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방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시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으로 밀어 넣는 억제효과(Push Effect)도 함께 작용시킬 수 있다. 북측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당분간 지속적으로 법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해도 새롭지 않다. 이 역시 주민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함께 잘 사는 구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그 위에 통일 직후부터 식량, 피복, 의약품 등 생필품과 최소한의 생활보조금 등이 북측 주민들이 본래의 북측 거주 인근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각자의 본거지 가까운 곳에서만 지급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2) 바이 코리아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바이 코리아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통일대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비밀은 사실상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점을 독자들께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정책 개발의 모습은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 올리게 하는 듯하다. 생각이 일단 여기에 미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이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오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통일대박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저 공염불일 뿐이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America First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이 북측 지역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기회가 닥칠 때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 그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 봐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적어도 8할 이상이라도 남한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한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자금으로서 GDP 7%에 해당하는 크기의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남한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바이 코리안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고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을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일부는 우선 우리 내부 규정을 통하여, 기술적 처리 방법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 위에 우리는 통일 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장래를 위한 구상을 장래 이해당사자가 될 강대국들의 사회지도자급 인사들 층에서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전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바로 목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게 된 상황에서 하려 한다면 이미 늦었다.

이러한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르는 생산 증가 5.6%에 더하여, 일부 군 병력의 산업 인력화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 2.4%, 그리고 추세적 성장 잠재력 3% 정도를 합산하게 되면,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경제는 놀랍게도 매년 11%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당당한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 구도이다.

우리가 통일비용을 놓고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아주 간단하게만 따져 보아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 통일은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얻는다. 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불황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경제 성장까지 더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누가 통일을 마다하겠는가? 우리는 돈을 쓰는 통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통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特需)에 따라 나오게 되는 순 이윤을 얻게 되는 기업들은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일반세금이 아닌 특별기여금(가칭)으로 별도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전술한 통일비용 종류 중 비상사태 대처 위기관리비용, 제반 제도 체계 단일화비용 등에 해당 되는 소모성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 3) 한시적 군비 감축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막대한 통일자금을 충당해야하는 입장에서 군비 지출은 GDP의 1% 이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이 가능할 때 통일 후 10년 동안 GDP의 7% 통일비용 가운데 매년 대략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자위대 유지 비용을 GDP 1% 선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다. 우리도 통일 후 우선 10년

동안만이라도 군비가 GDP 1% 수준에 머물러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넘보지 못하도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그렇다면 비록 한시적이라도 이와 같은 군비 축소가 남한 군부 내부의 반발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첫째, 남한 직업군인들은 통일 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의 각자의 직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군의 하부구조는 통일 당시에는 아직 생산성이 취약한 북측 지역 청년들을 위주로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다수 남측 청년들은 바로 산업인력화 하거나,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장래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강제로 군입대 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된다.**

셋째, 군의 재편 과정에서 과거 북측의 기간병 이상의 병력은 전원 전역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일반 생산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 북측 지역에서 군 조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남측의 예비역 장성과 장교 대다수가 현역으로 복귀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을 최단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안착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제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온 한미관계를 배경으로, 특히

편의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10년 기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가급적 상당 기간 미군이 통일한국에 주둔하도록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미군의 주둔 위치는 통일 당시로부터 복상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한다. 중국이 불필요하게 예민해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섯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제(CSC E)<sup>4)</sup>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 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이 답이다. 독일에서는 단순히 원리 원칙론에 얽매어 토지 실물반환 정책을 채택했다가, 일시에 220만 건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과거 남한에서 시행된 토지개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이후 아주 장기적으로 남측 토지제도를 북측 국유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제도 한 가지에 한하여는 남측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북측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는 현행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통일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

4)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국가전략, 제11권 제1호, 2005년 봄, 5-37면.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선부  
른 사유화 후 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한 만큼 다시 매입하여 사회간  
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내지  
천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하다. 일정하게 협소한 크기의 토지 때문에 일  
어나는 토지투기는 만인의 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결함 보완은 이 지구상에서 현실적으로 오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가능  
하다. 분단의 부산물이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모  
범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현해 낼 수 있다.

## 08 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인가?

통일대박의 보물단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경제 영역의 저변에는 그 경제를 원활하게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인위적 혹은 정치적 장애요인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산과 분배가 시장 원리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최대의 산출량과 최고의 만족도를 얻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통일한국에서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세계 제2위의 1인당 소득 수준까지 획기적인 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필요한 경제 외적 논리도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체제가 제약 없이 소기의 목표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해 줄 자유민주체제가 뒤를 받쳐 주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따라서 통일대박의 성공을 위하여 위의 4가지 필수요건을 뒷받침해 줄 저변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는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심 근간이 되어야 한다.

## 09 남남 갈등 해소의 길

보수와 진보가 각각 역점을 두는 안보와 평화는 그 두 입장을 갈등관계로 볼 일 이 아니라 보완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함께 통일까지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데서 올바른 길을 찾으며 힘을 한 군데로 모아 다 함께 통일에 도달하도록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통일로 가는 동력에 있어 누수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이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부담감은 통일대박 이라는 사실 인식에 따라 이제 대체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수 진보간의 남남갈등이다. 남남통합도 못 하면서 무슨 남북통합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명백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 진보간의 충돌은 정책 자체의 상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미흡에 따른 것이다.

지금 보수 진보 간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양측 주장이 모두 각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양측 모두 결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두 구도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수렴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통일 자체를 확실하게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 된다. 중간 목표만 가지고 서로 다툰 일이 아니다. 이 두 구도가 합치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힘이 하나로 결집될 때, 통일동력이 완성된다. 어느 한 쪽만의 힘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바, 이는 천만다행이다.

소위 보수 측의 태도는 반공을 바탕으로 북의 공산세력에 대하여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몰락한 공산주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입장이다. 물론 반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 수세적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명한 분단관리를 한다 해도 그 역시 충분치 않다. 이제 우리는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힘차게 나가야 한다.

소위 진보 진영에는 여러 갈래가 있겠으나, 주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6.15 선언이나 10.4선언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선언들의 배경을 보면 통일 자체보다는 평화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간파할 줄 알아야겠다. 그러나 평화공존이란 평화공존일

뿐이다. 평화공존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한다면, 이는 백일몽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공존은 결국 영구분단을 의미할 뿐이다. 많은 진보성향 인사들은 평화공존을 위하여 가급적 북 정권을 자극하지 말고 될수록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만 머문다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이 역시 통일 그 자체에 직접 목표를 두면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이 통일을 결정짓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실사구시적인 데까지 생각이 미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양측이 각각 주안점을 두는 안보와 평화는 현실적으로 필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이다. 이에 더하여 각각 통일까지를 목표로 하면서 북측 주민에게 진정성과 함께 다가갈 때 통일의 물꼬는 트이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통일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국민정서로부터 벗어나고, 보수 진보간의 남남 갈등이 해소되는 상태에서 라면 통일로 가는데 더 이상 큰 걸림돌은 없게 된다.

## 10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우리나라 주변 열강들의 한국 통일에 대한 개별적 입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 중 일 러 열강들이 존재하는데 통일이 되겠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독일의 경우를 보라고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을 점령했던 4대 강대국들이 모두 독일통일을 내놓고 반대했는데도,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 냈다. 우리의 경우에는 적어도 내놓고 반대하는 데는 없지 않은가 묻고 싶다. 주변 열강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수세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이다. 세월이 가면서 각국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바로 그 면에 유의하면서 착실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러시아는 이념보다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남한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러시아 국제연구기관 IMEMO 연구 보고서에서<sup>5)</sup> 남한 주도의 통일이 러시아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발표를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연해주를 비롯한 동부지역 개발에 눈을 돌리면서, 장차 앞서가는 한국의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비근한 예로 통일한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러시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시대에 이념도 이념이지만 우선 실익을 외면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심 한국 통일을 그리 반길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 그들을 이성적 사리 분별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통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국을 경쟁상대의 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보편적 진리인 무역이득(Gains from Trade)에 입각하여 상생의 길로 가는 점을 중점 부각시키면 그들의 태도도 결국 현실적인 실익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불거질수록 실제로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통일한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될 줄 안다.

---

5) 조선일보, 2011.11.4., IMEMO 연구보고서 관련

미국은 내심 한국 통일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상관없는 입장에 있다.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바야흐로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있다. 미국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이 통일까지 되면 미국 원조, 협조 완성의 성공적 결정판으로서 자국의 세를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다. 반면 분단 상태가 지속 된다면, 미국은 한국에 고가의 군사 장비를 계속 판매할 수가 있다. 양 손에 떡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하기는 하나 미 백악관은 2014년에 통일대박론 · 드레스덴 구상 지지를 선언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그 해 4월 미 하원 마이크 혼다 의원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책의 영문번역본<The Road to One Korea: Prosperity in Peace>이 저자 서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난 흐름을 따라 한국 통일의 방향과 구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 뒤에 버티고 있는데 남한 주도 통일은 어렵도 없다는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꽤 많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부적 단합을 바탕으로 하는 일관된 주도적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6)</sup>

우리가 영구분단을 자초하고, 북한이 자립할 수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 머무르게 된다면,

---

6) 동아닷컴, Korea Initiative Diplomacy 관련, 2013.4.3.



세간의 우려대로 사실상으로 북한은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서서히 그 길을 터놓는 방향으로도 가고 있다. “중국고구려사”<sup>7)</sup>라는 책의 출현이나 “발해는 당의 지방정부”<sup>8)</sup>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 준다. 고구려 시절에 신라, 백제와의 경계가 한강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단 한강까지는 중국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녘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오는 노력을 과감하게 시작하면서 북측 모든 민심이 남측을 향하고 동경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접수’하려 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리 정해진 어떤 필연의 수순을 밟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음의 사항들에서 공동인식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통일이라면 남한 주도 통일일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물론 중국이 한국 통일을 서둘러 적극 지지할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북·중 관계가 영원불변일 수도 없다.

베이징대 자칭귀 교수는 북한은 이제 중국에 자산이 아닌 짐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sup>9)</sup> 니얼

---

7) 필자가 2004년 6월 중국 지안의 고구려 고분총 매장지에서 구입한 중국에서 발간한 서적의 표지 제목.

8) 동아닷컴, 중국 CCTV7 다큐멘터리 “장백산” 관련, 2012.1.11.

9) 중앙닷컴, 자칭귀 베이징대 교수 관련, 2013.4.30.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는 말을 했다.<sup>10)</sup> 중국 외교부의 쉬부한반도사무 부대표는 “젊은 지도자인 ‘미스터 김정은’은 아버지(김정일), 할아버지(김일성)와 다르다. 한국과 중국에도 새 지도부가 등장했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sup>11)</sup>

### 시대는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중국이 유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한국 주도 통일이 이루어져도 중국에 특별히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는 상부상조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의 AIBB 가입으로 양국 공동 이해관계의 폭은 더 넓어지게 된다.

통일 후 육로로 연결되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은 통일한국과 함께 막대한 상호 이득을 보게 된다.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대박으로 갈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전체의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 보게 된다.

중국의 수준은 미국과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중간 단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이득과 편익을 무리 없이 얻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19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졌던 생각이다.<sup>12)</sup> 지금도 상황은 아직 크게

---

10) 매일경제, 2013.5.2. 1면.

11) 조선닷컴, “北 평화롭게 붕괴한다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 없다” 관련, 2013.5.6.

12) 1988년 2월 민영화(Privatization)를 주제로 하는 UNDP회의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렸을 때, 동남아 각국에서 한명씩 참석을 했는데, 당시 중국에서 온 개혁 개방 일꾼 ‘리드웨이’로부터 필자가 회의 중 직접 들었던 내용.

다를 바 없다.

둘째,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일한국이 중국을 군사적·경제적으로 공격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한국과 접경을 이루는 것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득이란 대가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북한을 후원하기 위해 수시로 무리수를 두어야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품위 있는 위상에 흠집만 내기 십상이다. 냉전시대도 지난 시점에서 구태여 그런 길을 걷지 않아도 될 입장인데 합리적이지도 않고, 핵무기를 둘러메고 개인숭배주의를 연출하고 있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다.

셋째, 통일한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계 받는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핵보유국이 되어, 모두가 핵무기 속에 사는 것을 원치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 대신 다른 어느 것도 북한 지도부 정권을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개발·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에도 결코 도움 될 수 없다. 여러 형태로 표출되게 될 북한 핵 보유 부작용은 상상 외로 클 수 있다. 지나간 역사 속의 의리와 눈앞의 작은 명분에 매달리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항미원조’ 시기에는 중국 자체 건국의 안전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북한 보호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겠다. 이제는 북한의 변질된 사상과 개인 숭배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NIIS) 리상양 원장은 북한과 중국 관계를 더 이상 혈맹이라는 이념적 사고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21세기 중국의 달라진 글로벌 전략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른바 중국이 말하는 대북 ‘정상국가론’이다.<sup>13)</sup>

뉴욕 타임즈 사설은 한국통일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에 귀를 기울여 가는 모습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4)</sup>

넷째, 중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묵인한다면 미군 계속주둔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후 안정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기간 미군 주둔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군은 통일 후 여하한 경우에도 현재보다 북상 주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미군 주둔은 단순히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평상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상시 우리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무리 없이 은연중에 조율해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

---

13) 중앙일보, “중국, 북한을 무조건 보호할 의무 없다,” 2014.10.28, 8면

14) New York Times, editorial, "Is Peaceful Korean Unification Possible?," 2014.12.11.

명한 방법이다.

이상으로 제1장을 마무리하면서 통일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3가지에 관하여 풀어 보았다.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감, 남남갈등, 주변 4강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이 책 <통일은 대박이다>의 출현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언급으로 급반전되었다.

남남갈등 내지 보수 진보간의 갈등은 안보나 평화에만 머물지 말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양측에서 모두 한발씩 더 나아가 통일 자체까지를 목표로 하는데서 양측은 충돌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구도에서 함께 힘을 합쳐 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주변 강대국들의 문제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을 최 우선시하는 입장을 존중하며 우리의 통일 쪽으로 그들을 유도해 나가는 현명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한 통일저해 요인들을 각각 풀어 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들은 없다고 판단된다.

통일은 이렇게 엄청난 이득, 즉 통일대박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통일 저해 요인들을 풀어나가는 길이 있고, 주변 강대국들과 조율해 나가는 방향을 알고 있다면, 통일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과제이다. 이제부터 Part II에서 그 부분을 차분히 개척하여 나가기로

한다.

- 여기에 이르기 까지 이렇게 보아 온다면 통일에 있어 3대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 보수 진보간의 갈등,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문제들을 모두 슬기로운 방향으로 풀어가면서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다음 제2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통일대박을 가져다 줄 통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R E U N I F I C A T I O N



제2편

통일을  
만들어  
가느 기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일을 만들어 가는 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기본 틀로  
는 R이론이 적합하다.

R이론에 근거하여 북을 북 정권과 북 주민으로 분리하여  
본다.

북 정권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응대하면 된다.

통일은 북측 주민들이 통일대박 개념의 진수를 보고 그  
민심이 남측을 향하게 되면서, 북측 주민의 손을 따라 오도  
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통일방안이다.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  
북주민의 손으로 통일**



## 00 통일대박을 통한 통일방안

실현성 있는 실사구시적 통일방안: “통일대박”으로

통일대박이란 통일 이후의 일로만 여기는 이들이 꽤 많다. 과연 그러한가?

통일대박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통일 이후의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일반 선남선녀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실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통일방안을 풀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요약하자면 통일 이전에 통일을 만들어 가는 데에 통일대박의 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물론 통일 이후에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가는 데에도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의 초반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나온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16가지에 이르는 통일방안 전부를 살펴보아도 모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추동력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해답은 바로“통일대박”에 있다.

통일대박의 위력은 이미 남한에서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증명 되었다. 통일비용에 주저하던 국민들 앞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나타나고, 연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도를 따라가는 행보를 개시하기 시작함으로써 박대통령의 언급 이후 단지 1년이라는 단기간에 대다수의 국민 정서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현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

바로 그 위력은 북한지역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만들어 내는 분명한 길이라고 믿는다.

북조선 인민들의 입장에서 출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념 사상의 주입에 따른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다면 통일은 없다. 그리하여 자의 타의를 불문하고 김정은 원수를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 있는 한 북한은 흐

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대박의 진면목이 북 주민들 대다수에게 알려지게 되면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통일 10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반로 북조선 주민들 자신이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통일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상황은 급전직하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이것을 확실한 현실로 이해하도록 다방면에 걸쳐 입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 주민들 대다수의 인식이 통일대박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 마음이 통일대박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때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통일의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북측 주민들이 통일대박을 가져다 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마음과 함께 남한 동포들에게 합류하는 날이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고 본다.

사람은 실리에 민감하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당위론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당위론과 명분에 더하여 실

리 부분이 배합 될 때라야 현실적으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 01 R이론

통일대박 구도는 R이론에 기초를 둔다. R이론의 요지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하나로 인식하고 한 가지 대응방안으로만 다루는 것은 잘 못이라는 데 있다. 북한 내에는 근본적인 면에서 서로 내용과 목적이 다른 2개 개체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즉 실제로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북 정권과 북 주민의 존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북정권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정권유지 자체이다. 이를 위하여 군사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개치 프레이즈가 “통일”로부터 “군사강국”으로 변경되어 나타났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를 계기로 먹는 통일은 싫다고 발설하면서 공산통일의 꿈은 접었지만, 민심결집 차원에서 겉으로나마 부르짖던 통일마저도 이제는 아예 확실하게 벗어던졌다. 이제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

강국”이라는 가식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 주민들은 김 일가 정권 하에서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의미를 갖는 다기 보다 단지 국가를 구성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1990년 대 초중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나갔는데도, 그저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말장난이 전부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북 주민들이 북정권을 결사옹위 하는 현상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고 존엄을 떠받드는 주입식 교육으로 세뇌시켜 놓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각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그 정권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굶어죽은 사람들만 불쌍할 뿐 그 정권은 멀쩡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북정권과 북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 정권에 대해서는 안보와 사상 대결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만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물질세계와 경제적 여유생활이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특히 긴급하다.

## 02 왜 민심인가?

강제적·자발적을 불문하고 북측 주민들이 과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오늘에 이르러는 김정은과 밀착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통일을 하려면 세뇌된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가장 긴요한 과제다.

해방 이후 김일성이 구소련을 배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설한 이래 북측 주민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받고 있는 세뇌교육에 따라 심하게 왜곡된 사상, 지식,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세척하지(deprogram) 않고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측 주민들을 탈세뇌 시키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민심이 남측을 향하게 될 때 통일은 가능하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측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수준과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기본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들 민심(public sentiment, the emotion of the masses)이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구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야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북측 인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탈세뇌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바로 그 탈세뇌로 이어지는 민심을 따라 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특히 유의하자. 여기에는 정신적인 면에 더하여 경제실리적인 면에서의 접근도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자는 통일이 앞당겨질수록 통일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통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소득 증대와 누구에게나 넘쳐나는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우리는 통일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면서 가급적 앞당겨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율해가야 할 것이라는 데에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하다.



## 03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북측 주민들을 탈세뇌 시키며 동시에 그들의 민심으로 다가가는데 있어 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 방법은 북측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경직된 조건 없이 시작하고 대대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통일 전에 북측에 SOC 건설이 들어가는 것은 북측 주민들의 남측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통일 후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또 통일 후 마무리 작업 진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이점과 비용 크기 감축이 따라 온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대하는 시각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반공적 태두리에 안주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퍼주기는 안 된다거나 종북주의라며 거센 반발을 하기 쉽다. 이는 남한에서 반세기 이상 지배했던 냉전논리의 타성에 따른 결과다. 반공 자세를 가지고 굳건히 지키고만 있다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

리는 지키기만 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분단을 극복하는 길로 가서 통일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sup>15)</sup>

SOC 투자의 북측 민심 관련으로 우선 몇 가지 살펴본다.

## 탈세뇌

대대적인 SOC 투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면으로 북측 민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의 GDP 1%를 통일까지 조건 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북측 SOC 기반 건설을 위해 투입한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20억 달러 정도가 된다. 북한의 GDP가 대체로 약 3백억 달러에 미달하는 정도라고 볼 때,<sup>16)</sup> 이와 같이 북한에 투입되는 SOC 투자는 매년 북한 전체 GDP의 사실상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갑자기 북한 전국 방방곡곡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북측 주민들에게도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 확산되면서 그들에게는 탈세뇌가 시작되지 않을 수 없다.

남측으로부터 들어오는 대대적인 투자에 접하면서 “미제와 남조선 패당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김정일 위원장님의 대를 이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제1비서를 결사옹위하고 일치단결하여 공화국을 지켜야

---

15) 신창민,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야>,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6.1, 2면.

16)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4.8.

한다”는 결연한 구호가 무색해진다. 그들의 버팀목이 되었던 방어태세가 졸지에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악독한 침략자들이라면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협력으로 그들을 도울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말로만 듣던 남북 간의 막대한 경제력 격차를 직접 피부로 실감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허구 속에서 부실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으로 세뇌되어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고, 심한 박탈감마저 느끼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정은은 물론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무서워서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속에 계속해서 하늘을 손바닥으로만 가리고 살 수는 없다.

## 식량 지원 필요성

이러한 SOC 투자에 따르는 바람직한 충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측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식량 공급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남조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점차 적개심을 바탕으로 하는 방어 태세에 커다란 변화를 맞을 것이다.

또한 SOC 투자 때, 평소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오직 식생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업 본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식량이 부족하면 평양과학기술

대학 건설 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투자 자재를 뒤로 빼돌리면서 우선 먹고 살 궁리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지원이 북의 군량미로 들어가거나 외국에 팔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전에 북이 남측보다 잘 살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왜 남침을 못했는가? 식량이 전쟁의 전부인가? 넓고 길게 보아야 한다.

## SOC 투자와 진정성

이러한 규모의 SOC 투자가 남한 능력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와 함께 남측 동포들의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다. 남한으로부터 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신뢰프로세스가 축적되면서 그들에게 쌓여지는 신뢰가 점점 불어 나가야 한다. 북한 정권은 말로는 모든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할 뿐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쳐들어온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북측주민들을 자기 곁으로 결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남측 동포들은 북측 동포들의 출신 성분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진정성과 함께 SOC 투자를 가지고 북측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측에서 성공한 실향민들이 고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 가운데 김씨 왕조의 개인 이기적 방어전략은 스스로 허물어지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철저한 세뇌공작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데 대하여 자성하고 예상보다 신속하게 탈세뇌 과정을 밟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탈세뇌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북측 지역에 SOC 투자 쏟아 붓기와 함께 전과 쏟아 붓기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길로 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외부정보 유입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 04. 북한지역개발 마스터플랜

또한 무엇보다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행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외형적 통일 전에 북한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거나, 통일 후에 북측 지역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이 지침서에 따를 때만 조화로운 개발과 전국을 망라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단순히 각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측 지역을 난개발로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일이 되고 만다.

## 05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북측 지역이 필요로 하는 SOC 주요 부문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시설, 송배전설비, 방송통신설비, 수도, 도시 가스, 지역난방, 중화학공업 개발, 산림녹화 등,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SOC 건설로 말미암아 남북 군사력 균형에 곧바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북측으로 들어가는 SOC 투자는 상당한 다면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미리 시행되는 만큼 통일비용 부담이 분산된다. 자연히 통일 후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통일 후에 이루어질 작업 기간도 그만큼 단축되는 아주 큰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게 남한 사람들의 진정성이 묻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SOC 건설은 김정성의 입지에 다소 더 보탬이 될 것이겠으나 그 보다는 남측에서 북측 주민들에 보내는 이 진정성과 남북 간 현실적 격차

자체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인식이 결국 엄청난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SOC 투자 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조건 없이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의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sup>17)</sup> 이 역할의 집행은 공사 형태의 민간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맡아서 하면, 가다 서다 하는 대북정책의 기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sup>18)</sup>

SOC 건설을 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필요한 기자재 등 실물 자본 일체는 남한에서 생산하여 북측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는 점이다. 여기에 부수하여 필요한 남한의 기술 지원도 가급적 동반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단순 노동 부분은 북측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그 임금 수준은 개성공단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진행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남한 GDP의 1% 규모로 하는 것이지만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라 실제 남한 실물 생산과 기술협력으로 남한 경제로 동시에 다시 유입되는 부분을 약 80% 정도로 한다. 나머지 20% 정도가

---

17) 신창민, <GNP 1%선 대북투자 바람직>, 통일한국, 통권 128호, 1994.8, 69-71면.

신창민, <통일비용 조성의 과제와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2010.9.10, 1-19면.

신창민,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통일과 법률, 법무부, 통권 제4호, 2010.11, 겨울호, 11-31면.

제4호, 2010.11, 겨울호, 11-31면.

Shinn Chang-min, <Korean Reunification: Costs, Gains and Taxes>, Korea Focus, Vol.19, No.1, Spring 2011, 82-89면.

18) 신창민, <대북경제교류협력 민간자율성 준중의 원칙>, 한우리연구원 세미나, 1998. 5.15.



북한 주민의 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남한 경제로부터의 누출은 결국 GDP의 1% 보다도 훨씬 적은 0.2% 정도 수준에서 그 과업을 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남한 내부에서의 장기 파급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그 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기여로 결과적으로는 획기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부록7〉 참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지연시키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의 후유증이 훗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

다. 근래 중국은 북한에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다.<sup>19)</sup> 최근에는 북·중 국경을 연결하는 교량, 도로, 철도망을 위하여 2015년까지 투입될 자금만 100억 달러를 넘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sup>20)</sup>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못마땅하게 보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소위 ‘피다 주었다’는 것을 모두 합산해보야 전부 80억 달러 내외라고 한다면 이번에 중국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일거에 해치우는 셈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통일 이전에 북측에 SOC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한다면 그 재원은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의 형태로 한다. 세금은 남측 GDP의 0.25%, 그리고 국채는 0.75%에 해당하는 크기로 도합 GDP의 1%에 이르도록 한다. 이 자금 마련은 정부가 주관하여 조성하도록

---

19) 정창현, (사)통일경제연구협회 발표, 2011.10.27.

20) 조선닷컴,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2013.3.10.

한다. 집행은 정부나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사 형태로 창립**하여 시행한다. 장기 안목에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북한 지역 개발 청사진을 만든 후, 그 청사진에 따라 남북협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sup>21)</sup>

이와 같이 정부와 협력공사가 역할 분담할 경우, 우리는 북측을 대함에 있어 그들보다 차원이 높은 곳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트랙 방식으로 포석하며 북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정부 혼자서 단선적인 정책 시행만으로는 운신의 폭이 지극히 한정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당국을 상대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북측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계속 강경 노선을 유지하다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다.

이러한 SOC 투자 노선에 대하여 김정은 집권 연장만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강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력 사정이 좋아지면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우라늄 처리비용으로 써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도움은 되었을 줄 안다.

---

21) 신창민, <남북 경제협력 창구>, 통일한국, 통권 제105호, 1992.9, 11면.

신창민, <남북경협외의 구체적 방안>, 통일원 내부회의 발표, 1993.6.

신창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심의분과 위원회, 1994.4.7, 1-12면.

그러나 이는 북측의 핵무기 개발 순서도 모르고 또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 돈이 없었다면 보다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더 굶어 죽었을 뿐, 김정일 손에 핵이 들어가는 것은 변동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돈이 들어가기 전에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핵폭탄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조그만 지역에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과 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을 구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결국 핵무기는 핵무기고,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일뿐이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만 들먹이며 서로 손가락질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SOC 건설 제안에 대하여 북한 김 정권은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이겠는가?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하며 무슨 이유를 달아서이거나 받아들이기로 본다. 그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모기장 이론’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을 부작용 없이 선별하여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측 주민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바깥과 두절된 상태로 철저한 세뇌교육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진 것이 벌써 수십 년을 지나고 있다. 그들의 자신감이 전혀 근거 없지도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연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고 말 것이겠는가?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소망사항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끝으로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는 기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노출시키면 어찌 하겠는가 우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독재국가가 아니고 따라서 독재자가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비밀리에 일을 벌일 수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밀 유지부터 신경을 쓴다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마치 무엇이 있는 양 감추려 드는 희극이 된다. 자유 민주국가인 이곳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그에 맞는 정치지도자들을 배출해 내고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서는 통일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구체적 기밀유지란 그 다음의 일이다.

## 06 정경분리정책 필수 불가결

정경분리 구도를 정착시켜야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구도를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R이론에 따라 북에 존재하는 대상을 2원화하여 2 트랙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은 수시로 변하는 정치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논리에 따라서만 중단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틀 없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름 잡는 일에 다름 아니다.

요약한다면 정권에는 정(政), 주민에는 경(經)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이는 자연적으로 정경분리 방식이라는 모습으로 가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sup>22)</sup>

---

22) 신창민, <먼저 '경제 분리 안'을 모색해야한다>, 동양일보, 1993.6.22, 2면.  
신창민, <기업들의 역할 분담>, 세계일보, 1993.6.23, 5면.

정치 군사 기류와는 별개로 별도의 길을 가는 일관성 있는 경제교류 협력이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자칫 북측 정권을 이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 권부가 핵무기 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무엇이 더 두렵다고 남측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교류협력을 막아야 하겠는가? 핵 실험장에 나타난 경수로 지원시기의 트러블 보면서, 북에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가? 이제는 좀 더 큰 안목과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지금 북의 경제총력은 남한의 1/40 에도 못 미친다.<sup>23)</sup> 앞으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나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밀릴까 보아 조심하는 것인가? 과거 냉전논리의 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되기도 한참 지났다.

또 경제 문제는 북과 제반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완전히 풀어 버리면 어찌겠는가라고 자못 정부의 협상 고수인양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불쏘시개 종류의 카드로 쓸 것이 아니다. 훨씬 더 크게 통일로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열어나갈 큰 틀의 기본 구도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을 만들어 낼 핵심 근간으로 아주 크게 쓰일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방패막이 정도로 잘게 쓰려고 하는가?

---

신창민, <대북정경분리정책이 바람직>, 매일경제신문 1993.7.6, 5면.

신창민, <대북한정책 정경분리 적기>, 매일경제신문 1994.1.8, 5면.

신창민, <대북경제교류협력 민간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우리연구원 세미나, 1998.5.15.

23)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6.8.

## 07 북 주민에 전과 투입 등 외부정보 유입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측에 대한 SOC 투입을 남측 GDP의 1% 수준으로 조건 없이 진행시키기로 한다면 북한의 경제 총량 관점에서 그 규모는 그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쏟아 붓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크기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북측 내부로 마치 폭우처럼 쏟아 붓는 듯한 전과 투입<sup>24)</sup>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북녘 동포들이 남한 생활의 실상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과 퍼붓기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인공위성 등 첨단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통일 후

---

24) 진용옥 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남북 양녘의 ICT 공동망 구축 전략>, 통일부 공모 과제 제안서, 2011.10.7.  
진용옥, <전과 우위권 확보와 군산학(軍産學) 복합체>, 2013.4.10.

모든 체계를 단일화 하는 기초 작업도 된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SOC 구축을 미리 하는 것은 통일 후 혼란을 그만큼 감소시키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통일 후를 염두에 두면서 한 단계씩 쌓는 것은 슬기로운 행보다.

하드웨어 중심의 모든 SOC 투입과 소프트웨어 형태인 전파의 조합은 결국 북측 민심을 근거로부터 흔들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적인 전략인 것까지는 수긍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또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전파 퍼붓기를 실행하여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또한 대북 정보유입 강화는 9월 7일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라디오, 휴대전화, 태블릿 PC, DVD, MP3,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전자통신 수단에 의한 대북정보유입<sup>25)</sup>이 참고가 된다.

현실적으로 북측 정권으로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차단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상대방 방어체계를 돌파해 낼 수 있다는 집념을 가지고 임하자. 가능한 길을 조금씩 더 늘려 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전자 관련 산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는 길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거나

---

25) 송중환,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외교 제119호, 2016.10. 14,52면  
<http://www.state.gov/j/drl/p/262180.htm> (2016. 9. 20).



종당에는 효과적인 SNS의 형태로 유용한 길이 더 나타나리라 본다. 나날이 새로운 단말기가 아이패드, 스마트폰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 수준을 넘어 서서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분명 실용적인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휴대폰 보급이 2016년 말경 이미 370만(스마트폰 약1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구하는 자만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북측 당국자들과 정면충돌을 하기 보다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되게 된다면 그 내용이나 콘텐츠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따로 걱정할 필요 없이 남한의 일상생활과 생각이 꾸밈없이 그대로 전파 되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 대박의 구도가 함께 묻어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는 결정적이 될 것이다. 결국 실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다. 그 가운데 북녘 동포들이 부지불식간에 남한 사람들과 그 사고와 감성체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같은 흐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풍선에 뼈라 날려 보내는 것처럼 무리하게 상대방의 말초 신경이나 공개적으로 자극 하는 직선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들의 심금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역풍만 맞게 되기 쉽다.

북 주민에게 보내는 전파 투입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체는 통일 대박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북 정권이 잘 못 되었다고 욕하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북측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모두 잘 될 수 있다는 진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길을 통하여 다가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동안 강성대국이란 허상 속에서 속고 살아 온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우리의 다각적인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 08 과학기술 교류협력

이상에서 보여 준 조건 없는 SOC 건설을 위한 투자와, 폭우처럼 마구 쏟아붓는 전과 투입에 더하여,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은 북측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안다.<sup>26)</sup> 과학기술교류협력은 SOC 건설을 위한 자본 투입과 전과 투입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윤택유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는 지식인들 간의 평상시 교류협력임으로,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가면서 남한 사람들의 진정성과 우월성을 느끼게 해 주고 알게 해 줄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실생활에 미치게 되는 유익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까지도 미치게 됨에 따라 북측의 전반적인 민심이 남측을 향하도록 만드는데 실

---

26) 신창민, <민족적 차원에서 본 과학기술교류협력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2013.2.26.

효성 있는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위에 북측 모든 주민들을 안무 하면서 통일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게 될 심리적 안정 정책을 통하여 북측의 민심을 우리 편으로 유도 해 오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도 통일의 가장 큰 공로자는 앞선 서독의 과학기술력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남북한 통일 논의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 뿐, 통일의 주요한 축매 혹은 통일 이후의 주요한 통합기제로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27)</sup> 그동안 과학기술이 정치적 결정의 종속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짧은 해방이 사라지면 과학기술교류는 자동적으로 중단되었다. 통일을 염두에 둔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계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자간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sup>28)</sup>

우선 민족적 차원에서 본 과학기술교류협력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은 전반적 구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다른 두 전략(즉 SOC건설과 전과투입)과 함께, 필수 불가결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

27) 이명진/정우탁,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정책연구 2001-16,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27면.

28) 전계서, 30면.

-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과학기술교류협력이 음으로 양으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통일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동질성 회복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남북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안 과학기술의 제반 분야에서 이질화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통일 후 단일화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비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교류협력이 통일 전과 후를 포함하여 통일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해 나가는 노력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선행 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이상에서 살펴 본 필요성 위에,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따라 올 것이 예상된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북한과 남한에는 서로 다른 강점이 존재할 수 있다.<sup>29)</sup> 북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다면, 남한의 시장 관련 노하우 그리고 필요한 자본과 배합이 이루어질 때, 괄목할만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남측에서도 북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을 살려내는 것은 양측에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게임이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통일한국에 있어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29) 이춘근,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STEPI Insight 제15호, 2009.2.1.

- 통일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하여, 양측에서 서로 이질화 되어가고 있는 꼴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길로 들어선다면, 남북 간의 기술격차를 보다 용이하게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의 이득이 되는 이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차 퍼주기는 안 된다 운운하는 형태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크게 치고 나갈 수 없다. 안보는 별도로 다룰 생각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섞어 놓으면 해법이 안 나온다.
- 과학기술교류협력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북한은 남이 아니다. 통일이 되면 명실 공히 한 집안이다. 한 집안 식구들이 성장과정에서 잘 먹지를 못해서 평생 안고 갈 체력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이 보다 더한 비극과 손해는 없다. 체력은 곧 국력과 직결 된다. 방치해 둔다면 결국 남한에 사는 우리들의 부담으로 남을 뿐이다. 민족의 장래를 포괄적으로 내다보아야지, 당장 목전의 안보만 다루며 매듭짓는데 만족하고 마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하겠다.
- 북한의 과학기술 능력을 일정수준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 후 과학기술인력의 유출 및 연구기관의 와해는 동독지역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남북한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하여 북측 지역의 과학기술인력들이 유지된다면 향후 통일시 북한경제 재건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최근의 상황을 둘러볼 때, 특히 최근의 북한 핵실험 문제와 도발적 행동에 따르는 정치기류의 경색이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SOC 분야와 전파 부분은 가까운 장래에 무난하게 쉽게 시작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교류협력 분야는 민간식자층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 통로에 관한 한 보다 신축성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 09 통일을 향한 3각 구도

우리가 북측의 민심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북측 민심이 그 정권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이반되도록 하여, 중국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내는 전반적 전략으로서 3각 구도(조건 없는 SOC 건설, 폭우처럼 쏟아 붓는 전과 투입, 그리고 과학기술교류협력)<sup>30</sup>를 중심으로 진용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의 두 가지는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과학기술교류협력 분야에서는 그 대상이 식자 계층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모든 인민들에게 파급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통일 3각 구도” 가운데 반드시 선후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각 부분이 별도로 각기 가능한 길을 따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

30) 신창민, <민족적 차원에서 본 과학기술교류협력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2013.2.26.



통일을 만들어 내는데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면서 그 모든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로는, 강력한 SOC건설을 중심축으로 하고, 전파 쏟아 붓기 전략과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양 날개로 하는 3각 구도이다. 이것을 앞세워 통일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앞으로 나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결국 민족 통일을 얻게 될 것이다.

# 10 아쉽게 끝난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드라이브

후세 사가들이 볼 때 통일은 박근혜 대통령 시기부터 태동되었다고 기술할 것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R이론을 비로소 처음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R이론은 현실적으로 대북 정책의 기본은 북에는 정권과 주민이 별개체로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1990년대 초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필자가 제안한 구도이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대통령도 그에 눈길을 주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2012년에 출간된 《통일은 대박이다》가 기초가 되어 2014년 초 박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시작

된 통일대박론의 틀이 국민정서를 비용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통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히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과정에서 드레스덴 선언, 다보스 포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가시적인 행보가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면서 통일로 가는 동력은 점차 희미해져 가다가 급기야 완전히 상실된 채로 한동안의 시일이 지나갔다.

그 후 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박대통령은 북핵 저지에만 올인 하는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R이론에 따르는 정권, 주민 2트랙 정책 가운데 북 정권에 대응하는 한쪽 날개만 가동시키는데 그치게 된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주민의 민심을 이끌어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인데 말이다.

지키기만 하려면 북을 압박하는 것도 좋고, 봉쇄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통일이 근본적 목표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북 주민의 민심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에 있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악수를 둔 것이다.

만일 박대통령이 북측을 몰아세우다가 중국에는 무력으로 해결을 해볼 생각이었다면 개성공단 폐쇄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것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기분풀이 나 단순 대외 전시용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대북 접촉을 몇 번 시도 했지만 북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유치하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증이다.

북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핵무기 몇 개와 자존심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고 무엇을 직접 해주겠다고 직선적 접근을 하다가 뜻대로 안되었다고 그냥 쉽게 물러서고 만다면 할 말을 잃는다. 우리가 북 주민을 이롭게 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단선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도 안 보일 수 있다.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배경으로 세가지 큰 성과를 얻어 내었다. 첫째 통일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라는 국민정서를 엄청난 이득이 따라 온다는 통일대박론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단기간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둘째 근래 남에서 대두된 통일대박의 정서가 북 정권의 사기를 은연 중에 위축시키고 있다는 진언이다.

셋째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의 통일정책에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지대한 공헌이 있었다. “통일은 대박이다” 책의 영문본이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 등 미국 수뇌부에 2014년 4월에 전달됨으로써 그 해 9월에 이르러는 “미백악관 통일대박론·드레스덴구상지지”라는 속보가 TV화면에 올라오기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통일대박론 중심의 통일정책을 알고 있으며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그 후 북핵 미사일 때문에 봉쇄 압박정책을 시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가 북 주민을 통하여 통일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미국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뒤돌아보면 실제로 여타 어정쩡한 정치인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북주민의 민심을 통해서 과감하게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였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 따르는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임기 후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 봉쇄 압박정책으로 안보 일변도의 정책으로만 갔다. 정작 통일의 길은 외면한 채 선명성만 강조하는 낮은 수준에만 머물다가 끝나고 말게 된 아쉬움이 남는다. 통일은 북 주민의 손을 따라서만 올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 초기에는 그 점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 단적인 표현이 봉쇄 압박정책이 고도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북 주민들에게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는 발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데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 해안까지 이르렀음에도 실제로는 별 성과를 얻지를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사람을 잘 못 썼다. 통일대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그렇게 오래 앉혀 놓고 어떻게 보좌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또 한 가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 한 것까지는 아주 잘 한 일이지만,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지를 못했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의 이 기구를 대통령이 확고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직접 진두지휘까지 했어야 하는 데 오합지졸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북의 정권과 주민을 분리 대처하여 통일로

가는 R이론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처음 열기 시작했던 박근혜대통령의  
훌륭한 역사적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 11 통일 후 북 주민들

북조선 동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 통일대박이란 남북한을 비롯한 모든 동포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구도이다. 통일된 당당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 함께 새로운 통일 국가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북조선 동포들은 통일시 단번에 큰 욕심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해야 한다.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주민들은 남조선 측의 협력에 부응하여 생산과 소득의 급속한 증대에 따라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올라 설수 있다. 이 아니 장쾌한 일이 아닌가? 꿈같은 얘기다. 그러나 결코 꿈만이 아니고 남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이고 사실이다.

\* 통일 후 처벌 위주는 없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 〈북조선 동포들께〉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숙원입니다.

이제는 통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때가 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

우리 말고 누가 우리 대신 통일을 가져다 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은 총칼이나 핵무기로도 안 되고, 정치 권력자들끼리의 정치 담합으로도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 봉쇄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 남조선의 7천 5백만이 넘는 동포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모두 8천여만의 동포들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 길을 따라 함께 갈 때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통일로 우리 북 남 조선 인민들은 모두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며 사람답게 그리고 격조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훌륭한 통일된 나라를 물려 줄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은 진짜 <대박>입니다. 통일은 남조선, 북조선, 해외동포들 모두에게 진짜 <대박>입니다.



남조선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예를 들어 3만 2천 달러 정도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근래 남한 2만 7천 달러, 북조선은 겨우 1천 달러 약간 상회할 정도 수준), 그로부터 10년 후에 북조선 인민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은, 놀라지 마세요, 4만 달러에 다가섭니다. 자그마치 지금의 30수배 나 됩니다. 대박입니다! 통일 시점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보다도 아주 훨씬 높은 상태로 갑니다. 남북 주민들은 그 후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격조 있게 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느 선진국에도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3대를 내려오며 약속해 온 “이밥에 고깃국” 이란 그냥 장난스런 우스갯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이 상부의 눈치를 보면서 살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니까, 혹시 남조선 사람들이 북조선 인민들의 값싼 노동력이나 지하자원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부터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조선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 설비 등 모든 실물자본을 남조선에서 생산하고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남조선은 남조선 대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합니다. 북에서는 북에서 대로 사회간접자본, 생산 설비 등, 남에서 가는 실물자본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에 따라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것을 뺏어먹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박이란 말은 일심전력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큰 이득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통일 후 10년간은 이렇게 따로따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는 남에서 대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도를 이미 따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남측에서 잡아 놓은 계획 대로 합심해서 함께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새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건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북에 사시는 인민들은 모두, 하나 빠짐없이 우리 겨레, 우리 동포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우리 혈육입니다. 지난날 이념과 사상의 굴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었던 많은 잘 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두 덮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김씨 왕조 일가는 망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국외 탈출 필요 없이 함께 잘 살아 가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 잘 못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우리는 모두 이 길을 따라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상생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미 북한 인권 관련 기록보존소 설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법무부로 이관하여 보존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고, 지금부터라도 북조선 내부에서 서로 지나치게 못살게 구는 일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세요. 통일 후 그 만큼 서로 더 마음이 편해 질 것입니다.

R E U N I F I C A T I O N



# 부록



# 01

##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소요되는 통일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북측 지역에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자금이다. 자본 형성을 위하여 투입해야 할 각 연도별 투자 규모는 Harrod - Domar 성장모형을 토대로 다음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① 우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 간 소득조정 완료 목표 연도에 나타날 남북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격차를 추산한다. 이것은 남북 경제가 통일하는 과정과는 무관하게 각기 독자적 성장 궤도를 따라 발전할 때 나타나는 GDP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통일 후 북측을 돕기 위하여 남측 경제가 위축되고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는 남측 국민들이 불필요한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② 여기에 자본 형성 목표 연도의 북측 예상 인구를 곱하면 남북 간 1인당 GDP 격차 완전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총 산출량의 크기가 계산된다. 그런데 이 규모의 연간 산출량을 얻으려면 자본산출량

비율이 2.2라 할 때, 바로 그 배수에 달하는 실물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③ 그러나 현실적 타협책으로 북측 소득수준이 남측 절반을 따라오는 상태에서 남북 경제의 분리관리(분리관리란 용어가 듣기 거북하다면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연방’이라 불러도 무방<sup>31)</sup>)를 종식시키고, 남북 경제를 완전히 섞어서 단일 경제권역으로 한다면 그 소요 자본 규모의 1/2을 마련하면 된다.

④ 그런데 북측 토지와 건물 가운데 사용 가능한 부분, 활용 가능한 지하자원 등 천연자원을 감안하여 북측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물자본을 위에서 산출된 소요자본 규모의 1/6 정도<sup>32)</sup>에 이르는 것으로 간주하자. 그러면 위의 소요 규모에 5/6를 곱한 크기가 실제로 북측에 조성되어야 할 실물자본 크기가 된다.

⑤ 목표 연도까지 완성되어야 할 이 규모의 자본 형성을 목표로 매년 투자 크기가 자금조달 편의상 남측 예상 GDP성장률과 동일하게 증가하도록 연도별 투자 크기를 산출한다. 여기에서 총 투자 크

---

31) 신창민,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 우리의 통일방안 충분인가? (사)한우리연구원, 제5회 학술대회, 1992.11.27, 47-48면.

32) Christensen, L.R., and Dianne Cummings(1974), <Real Product, Real Factor Input,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1960-1973>,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Workshop Series 7507, 1974.

기 가운데 일정 부분은 매년 감가상각에 따라 소멸한다. 때문에 이 두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남북 간 소득조정 개시 연도에 투입되어야 할 투자 규모  $X_1$ 은 다음 크기로 산출된다.

$$X_1 = \frac{\text{목표연도 } j \text{ 까지 조성되어야 할 실물자본의 총규모}}{\sum_{i=1}^j (\text{남측 GDP 성장률})^{i-1} \cdot (1 - \text{감가상각률})^{j-i}}$$

( $i = 1, 2, \dots, j$ ;  $j =$  자본조성기간 총연수)

⑥ 마지막으로 위에서 얻은 규모를 시작으로 매년 남측 GDP 성장률에 따라 목표 연도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소득조정 기간이 끝날 때 소기의 실물자본 형성 목표가 달성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는 다음의 부록 2에 <표3> ~ <표5>로 정리되어 있다.

# 02

##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표3] 2026~2035년 10년간 자본조성

| 연도   | 남북<br>1인당<br>소득차이<br>(\$) | 북측<br>인구<br>(천명) | 총 소요<br>자본<br>(억\$) | 총 소요<br>자본의<br>1/2<br>(억\$) | 실제 소요<br>자본의<br>크기 (억\$) | 연도별<br>투자액<br>(억\$) | 남측<br>GDP<br>(억\$) | 매년<br>투입액/<br>남측<br>GDP<br>비율(%) |
|------|---------------------------|------------------|---------------------|-----------------------------|--------------------------|---------------------|--------------------|----------------------------------|
| 2026 |                           |                  |                     |                             |                          | 1,227               | 19,068             | 6.4                              |
| 2027 |                           |                  |                     |                             |                          | 1,264               | 19,640             | 6.4                              |
| 2028 |                           |                  |                     |                             |                          | 1,302               | 20,229             | 6.4                              |
| 2029 |                           |                  |                     |                             |                          | 1,341               | 20,836             | 6.4                              |
| 2030 |                           |                  |                     |                             |                          | 1,381               | 21,461             | 6.4                              |
| 2031 |                           |                  |                     |                             |                          | 1,416               | 21,998             | 6.4                              |
| 2032 |                           |                  |                     |                             |                          | 1,451               | 22,547             | 6.4                              |
| 2033 |                           |                  |                     |                             |                          | 1,487               | 23,111             | 6.4                              |
| 2034 |                           |                  |                     |                             |                          | 1,524               | 23,689             | 6.4                              |
| 2035 | 42,139                    | 27,378           | 25,381              | 12,690                      | 10,575                   | 1,562               | 24,281             | 6.4                              |
| 합계   |                           |                  |                     |                             |                          | 13,955              |                    |                                  |



[표4] 2031~2040년 10년간 자본조성

| 연도   | 남북<br>1인당<br>소득차이<br>(\$) | 북측<br>인구<br>(천명) | 총 소요<br>자본<br>(억\$) | 총 소요<br>자본의<br>1/2<br>(억\$) | 실제<br>소요<br>자본의<br>크기<br>(억\$) | 연도별<br>투자액<br>(억\$) | 남측<br>GDP<br>(억\$) | 매년<br>투입액/<br>남측<br>GDP<br>비율(%) |
|------|---------------------------|------------------|---------------------|-----------------------------|--------------------------------|---------------------|--------------------|----------------------------------|
| 2031 |                           |                  |                     |                             |                                | 1,415               | 21,998             | 6.4                              |
| 2032 |                           |                  |                     |                             |                                | 1,450               | 22,547             | 6.4                              |
| 2033 |                           |                  |                     |                             |                                | 1,486               | 23,111             | 6.4                              |
| 2034 |                           |                  |                     |                             |                                | 1,523               | 23,689             | 6.4                              |
| 2035 |                           |                  |                     |                             |                                | 1,562               | 24,281             | 6.4                              |
| 2036 |                           |                  |                     |                             |                                | 1,601               | 24,888             | 6.4                              |
| 2037 |                           |                  |                     |                             |                                | 1,641               | 25,510             | 6.4                              |
| 2038 |                           |                  |                     |                             |                                | 1,682               | 26,148             | 6.4                              |
| 2039 |                           |                  |                     |                             |                                | 1,724               | 26,802             | 6.4                              |
| 2040 | 46,627                    | 28,070           | 28,794              | 14,397                      | 11,998                         | 1,767               | 27,472             | 6.4                              |
| 합계   |                           |                  |                     |                             |                                | 15,851              |                    |                                  |

[표5] 2036~2045년 10년간 자본조성

| 연도   | 남북<br>1인당<br>소득차이<br>(\$) | 북측<br>인구<br>(천명) | 총 소요<br>자본<br>(억\$) | 총 소요<br>자본의<br>1/2<br>(억\$) | 실제<br>소요<br>자본의<br>크기<br>(억\$) | 연도별<br>투자액<br>(억\$) | 남측<br>GDP<br>(억\$) | 매년<br>투입액/<br>남측<br>GDP<br>비율(%) |
|------|---------------------------|------------------|---------------------|-----------------------------|--------------------------------|---------------------|--------------------|----------------------------------|
| 2036 |                           |                  |                     |                             |                                | 1,605               | 24,888             | 6.4                              |
| 2037 |                           |                  |                     |                             |                                | 1,645               | 25,510             | 6.4                              |
| 2038 |                           |                  |                     |                             |                                | 1,686               | 26,148             | 6.4                              |
| 2039 |                           |                  |                     |                             |                                | 1,728               | 26,802             | 6.4                              |
| 2040 |                           |                  |                     |                             |                                | 1,771               | 27,472             | 6.4                              |
| 2041 |                           |                  |                     |                             |                                | 1,815               | 28,159             | 6.4                              |
| 2042 |                           |                  |                     |                             |                                | 1,861               | 28,863             | 6.4                              |
| 2043 |                           |                  |                     |                             |                                | 1,907               | 29,584             | 6.4                              |
| 2044 |                           |                  |                     |                             |                                | 1,955               | 30,324             | 6.4                              |
| 2045 | 51,586                    | 28,780           | 32,662              | 16,331                      | 13,609                         | 2,004               | 31,082             | 6.4                              |
| 합계   |                           |                  |                     |                             |                                | 17,977              |                    |                                  |

자료: 한국은행 DB, 주요경제지표(2016.12.) 및 환산

남한 GDP : 2015년 1조 3,775억 달러

1인당 GDP : 남한 2015년 2만 7,213달러

북한 2015년 1,225달러

인구 : 북한 2015년 2,477.9만 명

남한 2015년 5,061.7만 명

통일비용의 개략적인 추산을 위하여 사용된 제반 추정치:

1. 인구증가율 남한 : 0.5%  
북한 : 0.5%
2. GDP성장률 남한 : 2015-2030 3%  
2031 이후 2.5%  
북한 : 0.58%
3. 자본산출량 비율 : 2.2
4. 실물자본 감가상각률 : 6.7%

# 03

## 통일 시기, 빠를수록 유리

\*\*\*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 액수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통일 당시 GDP 대비 상대적 부담 비율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3년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위의 부록2 외에, 2012년도 자료를 가지고 추산했던 결과를 다음의 <표6>에 옮겨 놓는다.

[표6] 통일 소요자금 추산 결과 요약(2012년도 자료 기준)<sup>33)</sup>

| 소득 조정 연도  | 억 US달러<br>(2012년 불변가격) | 남측 GDP 대비 비율 |
|-----------|------------------------|--------------|
| 2026~2035 | 13,501                 | 6.3%         |
| 2031~2040 | 15,270                 | 6.3%         |
| 2036~2045 | 17,611                 | 6.4%         |

33)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한우리통일출판, 2013, 갱신판 1쇄, 221-223면.

## 04 남한·북한의 토지개혁 내용

\*\*\*

### 1. 북측 토지개혁 34)

북측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의 발효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반제·반봉건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적 토대 구축이라는 정치 목적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은 1948년 9월 9일 북한 헌법으로 합법화 되었고, 1958년 8월 농업협동화 완성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북측은 토지개혁을 통하여 100여 만 정보의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그중 98만 정보를 72만 4,000여 호의 농가에 무상분배했다. 북한은 소작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토지 몰수와 병행하여 이에 부수된 생산수단과 전체 산림을 국가 소유로 하여 국가에 귀속시킴으로 농촌에 대한 정권기구의 실권이 강화되었다.

이후 토지국유화의 성격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분배 받은 땅을 팔거나 저당 또는 소작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또 자신이 직접 경

---

34) 김유리, <북한의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pp.10-11, 14-15면.

작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 2. 남측 농지개혁<sup>35)</sup>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은 농지 개혁의 형태로 나타났다.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 입법 제정·시행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8월 15일 : 정부 수립

1949년 6월 21일 : 농지개혁법 제정

1950년 3월 25일 : 농지개혁법 시행령

4월 28일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6월 25일 : 북한의 남침

농지개혁으로 소작면적 145만 정보의 22%만 정부에 의해 분배되었을 뿐, 여타는 지주가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해방 후 국가적 대(大)사업으로 알려진 농지개혁사업은 용두사미로 끝났다”<sup>36)</sup>는 것

35) 김성호,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연구>, 농지개혁 연구, 홍선찬편, 연세대학교 출판

부, 2001, 264면.

36)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48면.

이 일반적인 지적이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대량의 농지가 일거에 투매되어 그 지가는 정부의 분배 농지보다 오히려 싼 경우가 많았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정부가 분배한 농지의 지가상환은 무려 196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그간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농가에 지가상환 부담은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분배든 지주의 임의방매든 결과적으로 농민의 자작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었다.<sup>37)</sup>

농지개혁의 주종을 이루는 일반 전답에 있어서 정부는 농지를 분배한 농민으로부터 5년간에 걸쳐 연간 수확량의 1.5배를 현물로 상환 받았다. 그리고 지주에게는 보상석수가 기재된 지가증권을 발급한 다음, 5개년 간 연도별 보상석수(=총 보상 석수/5년)에 매년 당시의 법정 곡가(정부 수매가격)를 곱한 현금을 지급(농지개혁법 제8조 제2항 제2호)했다. 따라서 농민의 상환과 지주에 대한 보상은 매년 20%씩 5년간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농지분배 2개월 후에 6.25가 발발하여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가보상방식을 둘러싼 법제처와 농림부의 대립은 농지개혁 이후 지주층을 살리느냐 몰락시키느냐를 가름하는 최대의 쟁점이었다.

---

37) 김성호,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연구>, 농지개혁 연구, 홍선찬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268-269면.

- 법제처 : 상환곡을 시가 또는 현물로 보상
- 농림부 : 상환곡을 법정곡가(정부 수매가격)로 보상

즉 법제처 안에 따라 지주에게 농민의 상환곡을 시가 또는 현물로 보상했다면 지주들은 6·25 시기의 극심한 전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농림부의 안에 따라 시중 가격보다 낮게 마련인 법정 곡가로 보상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인플레이션에 휘말리게 되면서 지가증권은 결국 한낱 휴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지주들의 몰락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sup>38)</sup>

---

38)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600면

# 04

## 05 토지 특수성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

### 1) 토지의 일반적인 생산요소로서의 속성

토지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소비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재화·용역 등을 생산하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포함하는 생산함수에 있어서 보완성(Complementarity)의 성격에 따라 다른 생산요소가 증가하면 토지의 한계생산량(Marginal Product)도 따라서 증가한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 이에 따라 토지의 한계생산량이 역시 증가하게 된다(아래의 <참조1>).

즉, 세월이 경과하면서 다른 생산요소들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기술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한계생산량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세월이 경과하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는 여타 생산요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바로 다음의 특수성이다.



## 2) 토지 특수성

토지는 그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을 재산축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국토가 협소한 국가에서는 특히 토지 투기에 따른 제반 폐해가 심각하다. 공급 물량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배경이나 이유가 어찌되었거나 결과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순수경제지대(Pure Economic Rent, 혹은 경제지대, Economic Rent)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이득으로만 돌아간다(<참조 2>).

물론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그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세율로만 순조롭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 <참조1>

생산요소 간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을 증명하기 위하여 손쉽게 Cobb-Douglas 생산함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Q = AK^{\alpha}N^{\beta}L^{\gamma}$$

Q : 산출량

K : 자본

N : 노동

L : 토지

여기에서 토지의 한계생산량 ( $MP_L$ )은,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 \gamma AK^\alpha N^\beta L^{\gamma-1} = \gamma \frac{Q}{L}$$

세월이 경과하면서 다른 생산요소(예를 들어, 자본)가 증가한다면,

$$\frac{\partial}{\partial K}(MP_L) = \alpha\gamma AK^{\alpha-1}N^\beta L^{\gamma-1} > 0$$

즉, 자본  $K$ 가 증가하면 토지의 한계생산량 ( $MP_L$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MP_L$ 도 증가한다. 이것을 생산요소 간 보완성(Complementarity)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다른 생산요소들의 증가를 비롯하여 기술 발전, 산출량 증가 등은 토지의 한계생산량( $MP_L$ )을 증가시키고, 이는 그 생산요소의 수요곡선으로 귀결되는 한계수입생산물의 높이를 위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 <참조2>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간략히 분석해보면,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공급되는 양은 일정하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수직 형태가 된다. 토지의 수요곡선은 다른 생산요소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한계수입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 mrp)

곡선이다.  $mrp$ 는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times$  한계생산량(Marginal Product)인 바, 설령 경쟁시장에서 한계수입이 일정한 경우라도 한계생산량은 그 채감의 법칙에 따라 우하향함으로 수요곡선도 우하향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 수직 형태의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인  $mrp$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지대가 결정되며, 파레토 최적을 얻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  $mrp$  내부에서의 변동이 아닌, 예를 들어 투기 등 제3의 요인에 의하여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그에 따라 지대 상승을 낳게 된다.

이를 도표로 그려 놓으면 장방형의 새로운 순수경제지대(Pure Economic Rent)로 나타나고,<sup>39)</sup>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불로소득과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아 상승한 지대(Rent)는 모두 지주의 불로소득이 될 뿐, 공평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

39) Pindyck & Rubinfeld, Microeconomics, Pearson, 2008, p.537.

# 05

## 06 통일한국의 토지 국유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비교

\*\*\*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에 있어, 통일한국은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공산권 내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토지도 생산수단의 일종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로 되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일반논리가 배경이다. 둘째, 지주계급은 타도 대상이며 계급투쟁의 결과로 토지는 당연히 전인민의 소유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정권에게는 그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데 토지 국공유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토지국유제나 공유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정부의 권력 장악·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 수단이 된다.

통일한국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장래 국가경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초석으로서의 토지국유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시장경제체제를 전제하면서 토지국유제를 채택하여야 할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실패의 한 가지 고질적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둘째, 경제이론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쟁에 따르는 효율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형평·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소득분배 한다. 셋째,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 등 부동산이 그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한다. 재산 축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투기와 불로소득, 그리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넷째, 이는 순수 경제논리에 충실한 가운데 도출된 것이다. 공산권 내지 사회주의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공산권의 토지국유제는 이념적 배경 아래, 사실상 국민 통솔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조명하여 보면 토지국유를 놓고 공산권 내지 사회주의권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이론을 앞세운다. 그러나 사실상은 정치적·이념적 배경과 목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에 비하여 통일한국의 경우 토지국유제는 순수한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합리성과 공정성 자체에 기초하여 정직한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시장경제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논리와 목적에 원천적으로 더욱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외형상 토지국유제 형태라 하더라도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 통일한국의 그것과 여타 공산권 내지 사회주의권은 전혀 그 종류가 다르다. 이를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 등 관련 부동산에 관한 바람직한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나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는 차원으로까지 논리를 비약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 06

## 07 북한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

북한 정권은 미 제국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핑계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망하게 된 것은 개인숭배주의로 간 것이 원인이겠으나 그 과정에서의 이념과 사상·정책에도 치명적 결함이 있다.

우선 공산주의 이론 자체의 미흡함은 칼 마르크스가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있었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무르익으면서 노동자들은 궁핍화에 내몰리게 되고,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이행하게 되어있다고 예언했다. 그러나 실체는 그와 달랐다.

그가 예언했던 대로 노동자들이 거지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자본 축적과 기술 발전 결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역사를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소위 자본주의(‘자본주의’란 명칭 자체가 공산 이론에서 만들어 졌)에서 가장 앞서 가는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공산당 독재로 갔던 나라들은 거의 모두 몰락하고 말았다. 그나마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일부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

서도 공산당 독재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말 것이다.

북한은 구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공산 정권을 수립했으니 태생적으로 그 공산주의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김일성은 공산 블록의 양대 축인 소비에트연방과 중국 톈바구니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으려니 주체사상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했다. 그런데 주체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자력갱생이 태동되었다. 이 구호를 높이 외치다보니 결국 경제가 망가지게 된 것이다.

작은 규모 경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식의 폐쇄경제로는 살기 어렵다. 그런데도 비교우위에 따르는 개방을 외면하고 능력에 맞지 않게 폐쇄경제로 가는 것은 자멸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자력갱생이란 극단적인 폐쇄경제 형태로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 정도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그리고 개인 숭배주의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자력갱생의 시작은 주체사상 연장선상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일성 개인 숭배주의로 구도를 잡으면서는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더욱 더 자력갱생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주체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후에는 외부세계로부터의 차단을 통한 체제수호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력갱생이란 폐쇄경제를 가지고는 주민들의 식생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보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다름 아닌 좋게 말해서 친북세력, 보다 솔직하게는 종북세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객관적으로 결국 망한 체제고 망한 국가다. 이념도 망했고 나라도 망한 것으로서 모두 끝장난 상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지령 속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한 인사들이 친북한정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름대로 전략적 차원에서 외형상으로만 그렇다면 모르겠거니와 실제로 속내까지 그렇다면 가소로운 일이다.

또한 오랜 동안 종북 행태를 보여 온 많은 대학교들의 총학생회와 친북 사제단에 대하여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각 대학교에 친북 성향의 총학생회가 다수 존재했던 배경으로는, 박정희 독재가 미운 가운데 독재정권에 맞서는 학생들이 너무도 대견하게 보였던 면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짐작된다. 일반인들은 감히 할 엄두도 못 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박정희를 반대하다보니, 같은 반대 입장 편에 있는 북한에서 동료의식을 찾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독재의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그 시절에 하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그대

로 남아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 시대를 소위 운동권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지내온 훗날의 교사들이나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교사들 가운데, 전교조를 통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친북 교육이나 친좌익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실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친북 사제단이 교인들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친북·주만은 선이다. 그러나 친북·정관은 악이다.

## 08북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허와 실

김정은의 속셈으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선 핵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비로소 경제건설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한편 서방세계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핵만으로는 그 체제를 지킬 수 없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두 시각은 모두 틀렸다.

김의 생각대로 핵 보유가 인정이 되고 그 바탕 위에 경제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 하여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 체제로는 궁핍을 면할 수 없고 백성들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그 체제를 가지고 그 나름의 개혁 개방의 노력을 한다고 해 보았자 몇 발짝 나가지도 못 한다. 남북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북 정권은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서방세계의 관점이 틀린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핵 보유가 불편하니까 그냥 해 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북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조만간 북 정권 소멸 밖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을 뿐이다. 순리를 벗어나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일이다.

## 09 우리도 어려운데, GDP 1% 정도나 빼낼 수 있겠는가?

\*\*\*

북측 민심으로 접근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도 어려운데 국내총생산 1%의 규모가, 대북 투자로 빠져 나가 버리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자리도 모자라는 가운데 경제가 어렵게 되니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로부터 과연 그만큼 규모의 누출이 가능하겠는가, 걱정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반 상식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결론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통일이 저절로 오기를 바란다면 웃기는 일이다. 그래서 무언가는 좀 해볼 마음이 있다 하여도, 통일로 가는 길에 국내총생산 1%에 달하는 큰 규모의 누출이 생긴다면 과연 이런 부담을 이 어려운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게도 된다. 그러

나 거시경제학의 심층적 분석은 이것이 기우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준다.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대북 SOC 건설 투입을 위하여 조성되는 GDP 1% 규모를 놓고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생산 공급한다. 그 과정에서 대략 8할 정도는 우선 남한 내부에서 누군가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그만큼 크기의 경제 전반에 걸친 총유효수요(Aggregate Effective Demand) 증가로 연결 된다. 이로부터 유도되는 생산 활동의 결실은 다시 누구인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순차적으로 총수요의 크기를 늘려 준다. 이로써 생산량이 증가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상에 따르는 효과는 경제가 침체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 경제의 움직임과 흐름은 개인적인 이해득실 계산 방법만으로는 따져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에 더하여 북측의 사회간접자본 투입은 머지않아 통일이 되는 시점에서 불가불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미리 시행되는 부분만큼 통일비용 지출이 시기적으로 분산되는 이점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부분은 미리 시행된 만큼, 통일 후에는 바로 다른 부분에 일찍 손이 미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이점도 생긴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심하게 세뇌되고 오도되어 있는 북측 주

민들로부터 탈세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민심이 결국 우리를 향하게 될 때, 통일은 그만큼 빨라진다. 이는 통일 자체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통일을 이루게 되면 경제적인 면만을 놓고 본다 하여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에 따르는 이득이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요약하자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GDP 1%의 투입을 놓고서, 우리 경제가 과연 그 부담을 견뎌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에 머물러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생각처럼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다. 더욱이 이처럼 1석3조의 지대한 효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과감하게 실제 행보로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적시하고자 한다.

## 맺는말

전 세계 우리 동포 모두 힘을 합쳐 통일을 만들고 모두 함께  
더불어 평화 속에 풍요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자.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통일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자. 반공을 앞세워 지키기만 한다 하여 통일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평화에 중점을 두며 무사히 지낸다 하여 통일이 자연히 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 자체에 확실하게 직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통일 시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될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북한 당국은 자격도 없고, 북녘 주민들은 능력도 없다. 결국 남한 사람들로 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분단 비용을 지속적으로 치르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 종당에는 결국 지리 멀렬한 나라가 되고 만다. 우리는 이 불행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더욱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대물림 해 줄 수는 없다. 지금 생존해 있는 우리들이 해결해 주고 가야 한다.

우리 현실을 똑바로 보자. 우리는 충분히 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부담이 적어진다. 그리고 통일은 사실상 부담이라

기보다 기회다. 그런데 대충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대박이다. 유사 이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그에 따라 넘쳐나는 일자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래도 통일에 무관심하고 터부시하는 풍조에 그냥 휩쓸려 대충 살고만 싶은가? 우리 모두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자. 종북주의자들만이 통일을 크게 외친다 하여 통일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연방제나 입에 올리는 종북주의자들은 통일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통일 그 자체를 보자.

우리가 통일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통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력통일 방법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정치협상으로는 결말이 안 난다. 결국은 남한이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경제력의 길로 가자.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녘 주민들의 민심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방법이 통일에 이르는 최선이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와 모범적 시장경제로 채워진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북녘 주민들의 민심이 김씨 왕조에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비록 40, 50년이 지난다 해도 북한 정권은 쉽게 무너진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지 모른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자.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통치 집단과 피지배 계층인 일반 주민들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자. 그리하여 북녘 주민들의 피부에 가서 닿을 수 있는 방법과 수준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남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전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자.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 자체에 다소 이득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의 빈틈없는 국방력 자체로 해결토록 하자. 사소한 곳까지 신경 쓰다가 정작 본체를 놓친다면 것처럼 어리석을 수는 없다.

북녘 주민들의 민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통일 후에 어차피 해야 될 북측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남한 총소득의 1%선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그렇다고 이것도 북측에 그냥 돈으로 넘겨주고 마는 것은 아니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직접 생산해서 실물로 보내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원활한 경제교류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할 정경분리 정책을 반드시 설치 놓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1% 가운데 1/5 정도는 북측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다. 이 길을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초지일관 꾸준히 해보자.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머지않아 하늘로부터 이 민족에게 내리는 응답이 올 줄 안다.

그리하여 통일이 되면, 통일 마무리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바람직한 수순으로 돌입하자. 그런데 아무리 목표의식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없으면 모두가 물거품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우선 북측 지역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백지 상태부터 시작하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첫째,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남북 지역을 분리관리한다. 둘째,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지역에 투입하는 모든 실물자본은 뚜렷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측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바이 코리아안 정책을 시행한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에는 군비 지출을 GDP 1% 선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도 추진 과정에서 위의 두 번째, 세 번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넷째, 북측 지역 토지 등 부동산 원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남측 지역의 토지제도 역시 국유제로 일원화 시켜서 시장경제체제의 암적 존재인 시장실패의 한 요인인 투기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자.

이리하여 10년의 통일 마무리 작업 기간이 지나면서 제반제도 단일화 작업도 모두 마무리 된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통일한국 전역을 망라하여 1인당 소득이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다. 일본, 독일 보다도 앞선다.

통일한국 국민인 남과 북의 우리들은 강성한 나라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모두 안정된 생활을 향유하며 격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자손만대의 후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 그냥 꿈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마음만 먹으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통일대박의 길을 따라 우리 민족에게 가슴

벽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들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뚜렷하게 하여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겨레 모두가 힘을 결집하면서 이 모든 바람직하고 숭고한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단기 목표는 통일대박의 내용이 저변에서 받쳐 주는 가운데 통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기 목표는 통일 후 10년 동안 통일대박을 얻게 될 보물지도를 착오 없이 찾아가 통일대박의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대박으로 통일을 만들고 통일대박으로 대박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우리겨레 본래의 숭고한 홍익인간 정신 속에서 모든 주변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시는 홍익인간의 웅대한 개념이 함당하다.

5.16 혁명 후 박정희 장군의 좌익 경력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우려하여 혁명공약 제1조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한다고 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그러한 세월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국시는 제자리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 반공은 정책이지 어찌 국시가 될 수 있는가? 당시 대학 신입생이던 필자마저 참으로 창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있던 기억이 있다. 이것이 박정희 장군의 면피를 위하여 삽입된 것이라고 이제 와서 김종필 전 총재가 실토하는 뉴스가 있었다.

태고 시절부터 술한 우여곡절의 고난 끝에 우리 겨레는 드디어 이 3단계 통일의 장엄한 목표를 충실하게 그리고 잘 이루어 내면서 새 세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새 출발의 시점에 와 있다. 우리 모두의 성공을 빈다.

## 참고 문헌

- 김병로,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2011통일의식조사발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움, 2011.9.21, 25-53면.
- 김병연, <통일의 경제적 효과>, 《남통일대박 가능하다!》, 통일준비위원회, 2014. 10.20, 14면.
-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48면.
- 김성호,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연구》, 농지개혁 연구, 홍선찬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 김성호 외, <농지개혁 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600면.
- 김연중, <통일 이후의 토지소유권사유화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000상반기호, 196면.
- 김유리, <북한의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 김정옥, <멀어지는 북-중, 복잡해진 해법>, 매일경제 2013.4.19, A39면
-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8, 604면.
- 박세일, <새로운 분단인가, 통일인가>, 박세일 칼럼, 조선일보, 2010.5.27.
- 박정원, 《북한 토지제도의 변화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남북통합지수》, 2014, 20면,142면
- 송중환,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외교 제119호, 2016년 10월, 52면
- 신창민, <통일, 누가 해주나? 왜 하나?>, 통일, 통권 129호, 1992.6, 24-29면.
- 신창민, <통일, 늦춰야 하나?>, 통일한국, 통권 제102호, 1992.6, 10면.
- 신창민,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2.8. 28, 1-46면.
- 신창민, <통일비용>, 통일한국, 통권 제104호, 1992.8, 11면.
- 신창민, <남북경제협력 창구>, 통일한국, 통권 제105호, 1992.9, 11면.
- 신창민,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 우리의 통일방안 충분인가?

- (사)한우리연구원, 제5회 학술대회, 1992.11.27, 28-74면.
- 신창민, <민족통일과 복지건설의 길>, 세계일보, 1993.1.1.
- 신창민, <통일시기 늦어질수록 비용부담 커져 - 통일비용 실체와 그 의미>, 통일한국, 통권 제109호, 1993.1, 42-49면.
- 신창민, <남북통일, 무엇이 문제인가?> [민불],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1993.3, 4-7면.
- 신창민, <통일비용 얼마나 드나>,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5.4, 2면.
- 신창민,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가능성>, 문민시대에 있어서의 남북한 관계 전망,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3.5, 38-50면.
- 신창민,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통상 분과위원회 세미나, 1993.5.7.
- 신창민, <통일비용 조달방안>,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5.11, 2면.
- 신창민, <통일의 경제구도>, 세계일보, 1993.5.14, 5면.
- 신창민, <통일, 해야 되나?>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5.18, 2면.
- 신창민, <독일의 교훈>,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5.25, 2면.
- 신창민, <통일, 경제력에 달렸다>, 세계일보, 1993.5.29, 5면.
- 신창민, <냉전논리에서 벗어나야>,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6.1, 2면.
- 신창민, <경협과 핵문제 분리 추진 필요>, 통일한국, 통권 제114호, 1993.6, 76-79면.
- 신창민, <통일을 위하여>,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6.8, 2면.
- 신창민, <남북경협의 구체적 방안>, 통일원 내부회의 발표, 1993.6.
- 신창민, <미래교육의 과제와 현실>, 중앙교육연수원, 1993.6.
- 신창민, <남북동향과 대북정책방향>,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6.15, 2면.
- 신창민, <먼저 '경제 분리 안'을 모색해야한다>,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6.22, 2면.
- 신창민, <기업들의 역할 분담>, 세계일보, 1993.6.23, 5면.
- 신창민, <정보와 지식은 공유하자>,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6.29, 2면.
- 신창민, <통일에 이르는 길>,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7.6, 2면.
- 신창민, <대북정경분리정책이 바람직>, 매일경제신문, 1993.7.6, 5면.

신창민, <김영삼 정부와 통일정책>,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7.13, 2면.

신창민, <북한 동포들을 안심시키자>,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7.20, 2면.

신창민, <‘신경제’와 남북경협>, 세계일보, 1993.7.23, 5면.

신창민, <북한의 핵협상>,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7.27, 2면.

신창민, <북한경제와 외국인투자 관련법>, 한국법학원, 1993.7.

신창민, <‘제로섬게임’으로 통일 안 돼>,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8.3, 2면.

신창민,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의 연장>,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8.10, 2면.

신창민, <통일 후 토지제도(상)>,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8.17, 2면.

신창민, <통일 후 토지제도(하)>,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8.24, 2면.

신창민, <한반도 남북간 경제거래 증대방안>, [대북경제정책방향] 21세기위원회, 1993.8.26, 1-27면.

신창민, <통일논의의 자체해야 하나>,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8.31, 2면.

신창민, <남북한 경제통합>, [포럼21] 한백연구재단, 1993, 가을호.

신창민, <통일 후 이윤분배제도>, 신창민 통일칼럼, 동양일보, 1993.9.14, 2면.

신창민, <통일국가형성비용>, 신정부의개혁과 남북통일, 한우리연구원, 1993.12.14, 43-58면.

신창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가>, 최근 북한정세 평가와 94년 남북관계 전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93.12.16.

신창민,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대책>, 남북경협추진방안, 안기부, 1993.12.22, 1-14면.

신창민, <대북한정책 정경분리 적기>,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8, 5면.

신창민, <통일비용과 조달방안>,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29, 10면.

신창민, <핵 경험 연계 고리 끊을 때>, 서울경제신문, 1994.2.17, 2면.

신창민, <‘통일주권확보’ 절실하다>,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2.19, 17면.

- 신창민, <통일국가형성비용>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학논집, 제20권 제1호, 133-144면.
- 신창민,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충청일보, 1994.3.3, 7면.
- 신창민, <‘구대동존소이’의 필요성>,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3.5, 5면.
- 신창민, <제재정책과 협력정책>,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4.2, 10면.
- 신창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심의 분과위원회, 1994.4.7, 1-12면.
- 신창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4.16, 17면.
- 신창민, <북미경협전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4.4. 1-7면.
- 신창민, <21세기 세계경제 질서와 한국의 경제>, 도산논총, 1994.5, 1-20면.
- 신창민, <보수 - 진보 대결 논리 타당인가>, 매일경제신문, 1994.5.21, 22면.
- 신창민, <연방제 통일시비>,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6.4, 9면.
- 신창민, <남북정상회담과 통일>,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7.5, 21면.
- 신창민, <남북정상회담>, 주간매경, 1994.7.13, 10-11면.
- 신창민, <김정일 시대의 남북관계>, 한국경제신문, 1994.7.21.
- 신창민,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 내외경제신문, 1994.7.21, 10면.
- 신창민, <대학생도 통일대열에 들어서라>,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7.23, 7면.
- 신창민,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응방안>,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7.26, 24면.
- 신창민, <‘북한 핵보유’ 대응방안>,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7.30, 24면.
- 신창민, <GNP 1%선 대북투자 바람직-남북한 교류협력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통일한국, 통권 제128호, 1994.8, 69-71면.
- 신창민, <김정일 시대의 북한 대외 경제·무역 정책 방향 전망>, 월간무역, 1994년 8월호, 12-15면.
- 신창민, <대결구도와 통일구도>,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8.27, 14면.



신창민, <현실적 통일정책 추진>,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9.12, 21면.

신창민, <지미 카터에 바란다>,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9.24, 10면.

신창민, <통일비용을 바로 알자>,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0.11, 25면.

신창민, <남북경협목적 확실히 하자>,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0.22, 27면.

신창민, <남북경협 유의할 점>, 충청일보, 1994.11.11, 5면.

신창민, <통일비용 마련방안>, 세계일보, 1994.11.

신창민, <통일교육에 관한 법률>,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1.5.

신창민, <북측도 정경분리로 경제회생>, 매일경제신문, 1994.11.22, 27면.

신창민, <통일을 향하여>, 민족대화합 통일문 열쇠, 충청일보, 1995.1.1, 6면.

신창민, <R이론의 조건>,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2.13, 27면.

신창민, <남북경협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고국소식, 1995.1.

신창민, <북미관계 개선과 통일>,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5.1.23, 25면.

신창민, <통일비용 걱정할 필요 없다>, 세계일보, 1995.2.2.

신창민, <열등한 쪽이 정리되어야 한다>, 통일한국, 통권 제141호, 1995.9, 67면.

신창민, <새로운 통일접근방식-R이론을 중심으로>, 통일, 통권 제172호, 1996.1, 67-69면.

신창민, <통일환경 조성 방안>, 통일단체장협의회 제1회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1996.12.

신창민, <황장엽의 귀순과 권고>, 충청일보, 1997.2.14, 4면.

신창민, <통일비용 추산의 비교분석>, 통일 준비, 한국사회과학아카데미, 창립 학술 세미나, 1997.9.26, 39-59면.

신창민, <'베를린 선언' 통일을 향한 거보>, 자유공론, 2000.4, 52-53면.

신창민, <대북경제교류협력 민간자율성 존중의 원칙>, 한우리연구원 세미나, 1998.5.15.

- 신창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남행 배경과 그의 목표>, 2001.9, 1-17면.
-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중앙대 경영대 학술제 발표, 2001.11.20.
- 신창민, <바람직한 국민적 공감대의 요체>, 2002.6.20.
- 신창민, <민족과 역사를 바로 지켜 내자>, Overseas Koreans OK Times, 2004.9, 6면.
-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통일 이후 우리민족발전 과제, 국회남북교류협력 의원 모임 및 (사)한우리연구원, 2005.4.4, 21-50면.
- 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비교분석>, International Symposium 2005 ②,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July 4-6, 2005, pp. II01-II20.
-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간번호 116, 2007, 1-120면.
-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2010.9.1, 19-32면.
- 신창민, <통일비용 조성의 과제와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 2010.9.10, 1-19면.
- 신창민,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통일과 법률, 법무부, 통권 제4호, 2010.11, 겨울호, 11-31면.
- 신창민, <통일 후 북측지역 토지정책 및 토지제도>, 통일과 법률, 법무부, 통권 제5호, 2011.2, 봄호, 21-56면.
-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초판 5쇄, 매일경제출판사, 2013.2.10.
- 신창민, <민족적 차원에서 본 과학기술교류협력의 필요성>,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2013.2.26.
- 신창민, <통일로 정말 대박을 내려면>, 매일경제신문, 2014.1.14.
- 신창민, “보수 진보 대결 관계인가?” 금융소비자원, 《Consumer 1st》, 2015, 5월호, 28면.
- 신창민, “한반도 통일과 G7진입 전략,” 뉴데일리미디어그룹 출범 10주년 기념 통일경제 국제심포지엄, 2015.5.27, 16-17면.

- 안국신, 《현대거시경제학》, 박영사, 2001.
-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이민수, <체제전환 이후 중국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 이상만, <경제협력-핵 연계전략 재고되어야>, 통일한국, 통권 제124호, 1993.6, 28-32면.
- 이상욱, <한국 토지개혁법제의 변천과 과제>, 토지법학, 제25-1호, (사)한국토지법학회, 2009.6.30.
- 이창석·김봉채,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일고>, 부동산학보, 제30집, 2007.8.
- 전성훈,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 분석>, 국가전략, 제11권 제1호, 2005년 봄, 5-37면.
- 정세현, <현장에서 본 남북관계: 학계에의 제언>, 급변하는 통일 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 서울대학교통일연구소, 창립1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2007.6.29, 11-13면.
- 진용욱 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남북 양국의 ICT 공동망 구축 전략>, 통일부 공모과제 제안서, 2011.10.7.
- 진용욱, <전과 우위권 확보와 군산학(軍産學) 복합체>, 2013.4.10.
- 최철호,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2.
-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사회의, 농생명식품공학부(AFT) 자료, 2007.7.13.
- 현승중, <북한 토지제도의 법적 고찰>, 동원 김홍배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외국어대 출판부, 1984, 497-502면.
- 동아닷컴, 김덕홍, 황장엽 관련, 2010.11.8.
- 동아닷컴,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2010.12.29.
- 동아닷컴, 김일성 민족 관련, 2011.10.31.
- 동아닷컴, 중국 CCTV7 다큐멘터리 “장백산” 관련, 2012.1.11.
- 동아닷컴, 통일부장관 관련, 2013.3.5.
- 동아닷컴, Korea Initiative Diplomacy 관련, 2013.4.3.

동아닷컴, 박근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관련, 2014.1.7.  
 매일경제, 여론조사, 2011.12.3.  
 매일경제, 2013.5.2, 1면.  
 인터넷 중앙일보, 나중일 전대사 관련 2011.7.23.  
 인터넷 중앙일보, 라이너 에펠만 관련 2011.8.13.  
 조선닷컴, 라이너 에펠만 관련, 2007.6.4.  
 조선닷컴, 러시아 IMEMO 특별보고서 관련, 2011.11.4.  
 조선닷컴, “평양의 김씨 왕조 공동운명체 50만 명…” 관련, 2011.12.22.  
 조선닷컴,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한국경제연구원 관련 기사, 2012.1.4.  
 조선닷컴,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연두보고서 관련, 2012.1.23.  
 조선닷컴, 법륜 스님 관련, 2012.2.2.  
 조선닷컴, 중국의 대북투자 관련, 2013.3.10.  
 조선닷컴, “北 평화롭게 붕괴한다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 없다” 관련, 2013.5.6.  
 조선닷컴, 여론조사 관련, 2014.2.3.  
 조선일보, “통일비용 550조의 절반이상 세금대신 금융기관 통해 충당,” 2014.  
 11.19, A2면.  
 chosunBiz.com, "통일후 북 재건비 550조... 증세 없이 조달 가능" 2014.11.20.  
 중앙닷컴, 자칭귀 베이징대 교수 관련, 2013.4.30.  
 중앙일보, “중국, 북한을 무조건 보호할 의무 없다,” 2014.10.28, 8면  
 The Korea Herald, 박근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관련, 2014.1.7  
 MK뉴스, ‘중국, 북한에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 지원’, 2012.1.30.  
 New York Times, editorial, "Is Peaceful Korean Unification Possible?,"  
 2014.12.11.  
 통계청, Data Base, 북한통계  
 통일부 정책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13.8.  
 한국은행, DB, 북한경제자료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16. 12.  
 한국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로 본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경제

통계국 국민소득

-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Richard Irwin, Inc., 1968, pp. 227–297.
- Christensen, L.R., and Dianne Cummings(1974), "Real Product, Real Factor Input,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 1960–1973," 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Workshop Series 7507, 1974.
- Krehbiel,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Europe, New York: Praeger, 1989.
- Intriligator, Mathematical Optimization and Economic Theory, Prentice–Hall, 1971.
- Pindyck & Rubinfeld, Microeconomics, Pearson, 2008.
- Chang Min Shinn, "Theory R," US–Korea Tomorrow, Vol. 5, No. 1, January 2002, pp.14–15.
- Chang Min Shinn, "Reunification Cost vs Division Cost," US–Korea Tomorrow, Vol. 5, No.3, July, 2002, pp.9–10
- Chang Min Shinn, "Confirmation of the Same Long Term Goal of Two Allied Countri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Truman Conference, Independence, Missouri, USA, Oct. 23, 2003.
- Shinn, Chang–min, "Korean Reunification: Costs, Gains and Taxes," Korea Focus, Vol. 19, No.1, Spring 2011, pp.82–89.
- CIA, North Korea, the World Fact Book 2011.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12, USA, Appendix B, Table B–1~2 <http://www.state.gov/j/drl/p/262180.htm> (2016. 9. 20).

## 통일은 대박이다

---

- 초 판 1쇄 2012년 7월 16일 <매경출판(주)>  
5쇄 2013년 2월 10일 <매경출판(주)>
- 갱신판 1쇄 2013년 5월 10일  
6쇄 2013년 11월 17일
- 제3판 1쇄 2014년 2월 7일  
5쇄 2014년 9월 4일
- 제4 갱신판 1쇄 2015년 1월 1일  
2쇄 2015년 1월 5일
- 제5 증보판 1쇄 2015년 7월 1일
- 제6판 1쇄 2015년 10월 3일
- 새 판 1쇄 2017년 3월 1일

지은이 신창민

펴낸이 엄상호      펴낸곳 한우리통일출판

등 록 2013년 8월 8일

주 소 우)0604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60.  
내성빌딩 2층

전 화 010-9423-3399

팩 스 02)507-5777

이메일 cms21@cau.ac.kr

인쇄·제본 유니크기획 010-8810-3422

---

ISBN 979-11-951120-5-0

값 1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 번호: CIP2013017605)」